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목록 (77)

I. 사회·정치개혁 관련 (7)

- 1-01 참여정부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 1-03 반부패 투명사회 구현
- 1-05 포괄적 과거사 정리
- 1-07 언론분야 개혁
- 1-02 사법제도 개혁
- 1-04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 1-06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II. 정책추진 관련 (47)

경제분야 (17)

- 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2-03 신용불량자 대책
-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 2-15 향만인력 공급체제 개혁
- 2-17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확산
- 2-02 금융시장 안정
-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 2-06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2-08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 2-14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 2-16 해외자원 확보 경쟁

사회분야 (24)

- 2-18 노인복지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4 건강보험 개혁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8 여성인력개발
- 2-30 차별시정 강화
- 2-32 노사관계 개혁
- 2-34 교육격차 해소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4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 2-19 장애인 정책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3 국민연금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7 호주제 폐지
- 2-29 성매매 방지
- 2-31 비정규직 보호
- 2-33 일자리 창출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통일외교분야 (6)

- 2-42 참여정부의 북핵문제 해결과정
- 2-44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
- 2-46 국방개혁 2020
- 2-43 남북관계 발전
- 2-45 글로벌정상외교
- 2-47 이라크 파병의 성과와 교훈

III. 정부혁신 관련 (21)

- 3-01 정부혁신의 확산과 관리
- 3-03 정부 성과관리시스템 혁신
- 3-05 국민참여형 민원제도 개선
- 3-07 기록관리 혁신
- 3-09 참여정부 인사혁신
- 3-11 고위공무원단도입과 공직개방
- 3-13 균형인사 정책
- 3-15 제주특별자치도
- 3-17 교육자치 정책
- 3-19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 3-21 새로운 도전, 국가위기관리
- 3-02 정책품질 관리체계의 마련
- 3-04 정부조직과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 3-06 전자정부시스템의 구축
- 3-08 온나라 정부업무관리시스템
- 3-10 정무직 및 공공기관 인사시스템 혁신
- 3-12 공무원 성과관리 및 훈련시스템 확산
- 3-14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 3-16 자치경찰제 추진
- 3-18 주민 직접 참여제도
- 3-20 정책홍보시스템 혁신

IV. 청와대 개혁관련 (2)

- 4-01 대통령비서실의 변화와 혁신
- 4-02 국정과제위원회의 설치와 운용

해외자원 확보 경쟁

- 해외자원개발 성과 및 향후 대책 -

200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발 간 사

참여정부가 혁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말 그대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반발과 저항, 분열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과 호도 앞에 정부의 어떤 정책 활동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혁신과 통합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참여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당시의 목표와 정책 환경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해결과정, 해결방법도 가급적 상세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이런 고민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중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과정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 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대 비서관실별 집필 T/F팀과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전·현직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과 비서관, 전·현직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접 또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절과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외 소중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중심의 기록은 ‘사적 기억’을 ‘공공의 기록’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중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적 곡해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줄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외 소중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혁, 정책추진, 정부 혁신, 청와대 개혁 등 4개의 대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대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혁 분야 7개 과제, 정책추진 관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혁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대 개혁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작성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집필을 책임진 청와대 각 비서관과 담당 행정관, 부처의 담당 공직자,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필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물론 국정과제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이 해당 과제를 직접 검토하거나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현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는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책보고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전·현직 공직자, 국책 및 민간 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발간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 과제를 PDF 파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 및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올려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각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의 재배포 및 연구자의 자유로운 인용도 허용할 것입니다.

정책보고서를 내놓는 지금 이 순간, 정책과정 중심의 새로운 백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냉철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떠나 정책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과 진실이 있는 그대로 읽혀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를 국민께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김 병 준

- 목 차 -

제1장 에너지·자원, 도입이나 개발이나	1
1.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	1
2. 에너지 빈국의 애환	3
3. 자원개발 30년 회고	6
제2장 참여정부 출범과 격변하는 국제 에너지 정세	7
1. 급등하는 유가, 신고유가 시대 도래	7
2. 고개드는 자원민족주의	8
제3장 본격적인 자원확보 경쟁시대 돌입	11
1. 결단, 정상 자원외교	11
2. 양자 간 자원협력, 전략적 활용	35
3. 새로운 자원개발 전략의 필요성	43
제4장 해외자원개발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48
1. 전략과 추진체계의 재구성	48
2. 재원조달 방안 수립의 가속화... ..	52
3. 대두되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필요성	63
4. 기술과 인력육성의 기반 마련	71

제5장 멀지만 가야 할 길, 해외자원개발	75
1. 참여정부 자원개발의 성과	75
2. 앞으로 남은 과제들	81

머 리 말

하루 220만 배럴, 연간 8억 배럴 이상의 석유를 소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원의 개발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정,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관건이 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이제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인 자원전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 방안으로서 우리 국적의 기업이 자원보유국에 진출하여 직접 자원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자원개발이 확대되면 국제 자원가격이 올라도 우리 기업들이 그 수익을 챙김으로써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자원공급 여건이 불안할 때에도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자원을 우선적으로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자원의 공급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처음 실시한 것은 1977년 11월 한국전력공사가 25%의 지분으로 파라과이의 San Antonio 우라늄광 탐사사업에 참여한 것이며, 최초의 석유개발은 1981년 5월 코데코에너지(주)가 인도네시아 서 Madura 유전 개발사업에 진출한 것이다. 이후 2005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석유와 가스 및 광물 자원개발에 약 70억 달러를 투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실적은 주요 자원수입 선진국들에 비하면 소규모이며 해외자원 생산이나 매장량 확보 수준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2004년 참여정부 들어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중국과 인도 등 저개발국들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가 간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면에 자원부국에서는 유가상승을 오히려 자국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원민족주의 및 자원보호정책을 표방하여 우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여건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해외자원개발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수행해 내었다. 나이지리아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여러 산유국에서 대규모 석유탐사권을 획득하는 등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138억 배럴의 석유잠재 매장량 중 62%가 고유가 파고가 닦인 지난 3년 동안에 이룩한 성과였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재원 마련, 제도 개선 등 자원개발투자의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 자원외교 활동 등을 통하여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기업들 역시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선진국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선진국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 장 에너지·자원, 도입이나 개발이나?

1.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

2006년 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해 유럽 전체를 떨게 했다. 이전까지 유럽은 천연가스 소비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해 왔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유럽 간 파이프라인 경유지였다. 가스분쟁이 일어난 외형적인 까닭은 가격문제였지만, 그 내면에는 러시아가 친 서방노선을 내세우며 오렌지 혁명으로 당선된 우크라이나의 유셴코 대통령을 길들이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 분쟁 후 친 러시아 정책을 편 야누코비치가 총리에 기용되었고, 이에 따라 유셴코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자원무기화의 위협은 중동과 미국,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촉발된 제 1-2차 석유파동 등의 사례를 비롯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사실 자원은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 ; 이해관계자)들이 전략적 목적으로 공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재화가 아닌 전략적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중동이 주요 자원분쟁지역이었으나 최근 들어 자원무기화 경향은 러시아,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거의 전 대륙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97%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정세에 매우 취약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무기화와 자원민족주의 등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에너지공급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자원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는 비축과 해외자원개발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약 124일분의 석유를 비축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비축은 현물시장에서 자원을 매입하여 단순 저장하는 것으로 자원안보를 지키는 데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해외자원개발은 탐사개발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만 한다면 가격의 저렴성, 외화절감,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산유국과의 자원협력 및 교섭력 증

가 등의 효과가 있어 자원공급 안보를 확보하면서 경제적 부까지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또, 국제 자원가격이 상승할 때 자원수입의 경우에는 자원가격의 상승분 전액이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하여 들여오게 되면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지불 증가액을 개발이익의 형태로 환수하게 되어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을 준다.

해외자원개발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하여 국민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매년 포춘 지가 선정하는 세계 10대 기업을 보면 2006년의 경우 석유 메이저 기업인 ExxonMobil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Shell, BP, Chevron, ConocoPhillips 등도 포함되어 10대 기업에 석유 메이저 5대 기업이 들어갔다. 이처럼 자원개발 산업은 경영, 기술, 정보와 네트워크가 합쳐진 종합산업으로서 위험도는 높지만 매우 큰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사업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준다.

해외자원개발은 개발에 의한 수익 이외에 연관산업 또는 부대사업 진출에 따른 수익 창출도 가능하게 해준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기계, 건설, 수송, 금융 부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자원개발의 증대는 개발 및 생산에 관련된 Platform 건설, 운영기술의 발전 등 2차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과 관련된 석유개발자금 조달 및 운용과 관련 은행의 Financing 기능 강화 및 건축물, 수송선 등의 대규모 보험수요 창출에 따른 보험산업의 활성화 등 3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표 2-4〉 석유개발사업의 연관산업 효과

구 분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플랜트산업	개발·생산설비 등 석유개발 관련 기계장치에 대한 설계, 제작산업의 활성화 Platform, 배관망 등의 설치·운영 기술 및 각종 기계장치 등에 대한 소재 산업의 활성화
건설산업	석유의 개발·생산 및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목사업 등 건설사업의 활성화 상기 건설에 필요한 건설기자재 수요증가로 인한 건설사업 기반 강화 및 건설기자재 해외수출로 외화획득
수송산업	생산물에 대한 수송수요의 증가로 해상, 육상 등 수송산업의 활성화
금융·보험산업	자원개발자금 조달 및 운용과 관련 은행의 Financing 기능강화 및 구축 물, 수송선 등의 대규모 보험수요 창출로 보험산업의 활성화
기타	자원개발 관련 건설·설계 감리, 선박 Broker, 선물중계 등 각종 용역사업 의 활성화

2. 에너지 빈국의 애환

가. 에너지 빈국(貧國)의 애환

1970년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개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리
의 에너지 소비도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의 중화학공업과 수출산업 우
선정책에 따라 산업용 석유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970년에서 1973년 사이에
석유소비는 무려 45%나 늘어났다. 석유수요가 상당히 증가했으나 다행히 석유가격
이 낮아 별 어려움 없이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3~1974년 중동전 발발로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함에 따라 원유가격이
네 배로 상승하여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
다. 1974년 한 해 동안 국내 물가는 30% 이상 상승했고, 겨우 균형을 맞춰 가던 국
채수지는 다시 악화되었다. 더구나 중동이 비우호 국가에 대해 원유공급을 제한하
였다.

이에 놀란 정부는 11월 9일 오원철 경제특사를 미 3사에 특파해 원유확보 교섭을
추진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등 4개 항의 친 아랍 정책을 발표하고 그해

12월 대통령 특사(최규하)를 사우디와 쿠웨이트에 파견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1978년 10월 이란에서 회교혁명이 발발, 당시 세계 석유소비량의 10%를 공급하고 있던 이란의 회교정부가 원유공급을 중단하자 세계 석유수급에 차질이 생겨 국제 원유가격은 다시 한 번 급상승하여, 제2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였다.

제2차 석유파동으로 원유가격은 2.5배로 상승하였다. 제1차 석유파동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폭이 적었지만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은 더 컸다. 국민총생산에서 석유수입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9년 6.9%에서 1982년에는 10.5%로 상승했다. 이와 같이 에너지수입에 지출되는 외화부담 증가는 무역수지 압박과 1979~1981년의 고 인플레이의 원인이 되었고 1980년에는 우리 경제개발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1970년대 우리 경제는 도약의 날개를 펴고 있었으나 국내에 부존자원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 산유국의 입김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해야 하는 에너지 빈국의 서러움을 톡톡히 치렀다.

나. 해외자원개발 불을 지피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국제 원자재 파동으로 정부는 소요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민경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1978년 1월 동력자원부를 발족시켰다. 1978년 3월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해외자원부를 신설하였고, 동년 12월에는 석유개발공사(현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였다. 또, 이때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1977년 한전이 San Antonio 우라늄광 탐사사업에 25%의 지분으로 참여한 것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불을 지핀 것은 1981년 5월 코데코에너지(주)가 인도네시아 마두라 광구를 탐사하면서였다. 코데코에너지(주)는 3년간의 탐사 끝에 1984년 유전을 발견하였다. 이후 1984년 2월 유공(현 SK)을 주축으로 참여한 북 예멘 마리브(Marib) 유전에서 1985년 11월에 석

유를 발견하자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정부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3년에는 탐사사업에 대해 실패하면 정부유자금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성공불 용자방식을 도입하여 기업들의 해외유전탐사 노력을 크게 북돋았다. 그러나 이후 6~7년 동안 우리 기업들은 제2의 마리브를 찾겠다는 꿈에 젖어 의욕적으로 투자하였으나 경험이 일천하고 기술이 부족하여 마리브와 예멘 광구를 제외한 18개 탐사사업이 모두 실패로 끝나는 참담한 결과를 겪었다.

1990년대 들어 석유개발사업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90년 10월 석유개발공사와 (주)대우 등 한국 측 컨소시엄은 리비아에서 가채매장량 약 9.6억 배럴 규모의 엘리펀트(elephant) 유전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였다. 석유개발공사와 민간 7개사가 함께한 이 컨소시엄은 1992년 5월 베트남 11-2 광구의 광권을 획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운영권자로 참여하여 탐사사업을 실시하였다.

해외석유개발 사업에 대한 용자지원제도 개선 등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1995년부터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 말까지 3년 동안 10개 생산광구, 3개 개발광구 및 28개 탐사광구 등 총 41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해외 석유·가스 개발투자액도 연 1.5억 달러 규모에서 4.5억 달러 규모로 급증하였다.

다. 다시 침체의 길로 들어서다

1997년까지 새로운 도약기를 경험했던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외환위기가 들이닥치자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세계경제의 침체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여 이미 투자된 자원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된 반면 환율상승으로 운영비나 투자비에 대한 부담은 배가되었다.

기업 구조조정과 부채비율 200% 제한으로 자원개발사업들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은 갖고 있던 유전을 매각하였다. 그 결과 2002년까지 5년 동안 26개 사업이 매각되었다. 석유 및 가스개발 투자비는 1997년 4.5억 달러에 달했으나 1998년에는 2.9억 달러, 1999년에는 2.6억 달러로 감소하여 신규 투자가 거의 추진되지 못했다.

해외자원개발 붐을 타고 설립된 해외석유개발협회의 27개의 회원사 중 9개사는 석유개발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였으며, 생산광구만 보유하고 관련부서를 해체한 기업도 6개사에 달했다. 또 당시 석유개발사업 참여를 검토하던 경동, 대림, 삼탄 등 일부 기업들도 사업 참여를 포기하였다. 해외석유개발협회는 27개사에서 13개사로 회원사가 대폭 감소하고 협회 유지가 어려워 석유협회로 통합되었다.

석유개발사업이 극도로 침체됨에 따라 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각도에서 검토되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1998년 석유공사의 용자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여 석유공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민간기업들이 석유개발사업을 축소 내지 포기함에 따라 정부가 석유공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매 3년마다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2001년에 제1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공표되었다. 이 시기에도 1998년 석유공사가 운영권자가 되고 SK와 공동으로 탐사를 시작한 베트남 15-1 광구가 탐사 약 3년 만인 2001년 8월 대규모 상업유전을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으나 침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 자원개발 30년 회고

석유위기가 발생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활기를 보였다. 그러다 다시 침체의 길로 들어선 것은 외환위기와 저유가 지속이라는 시대적 상황 탓이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을 위한 기업 슬림화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위험도가 높고 성과를 얻는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기피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장기간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국제 자원시장이 수요자시장(buyer's market)으로 변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퇴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몇 가지 아쉬움은 남는다.

첫째는 1, 2차 석유파동을 겪었는데도 에너지가 국제 정세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전략적 상품이라는 인식을 국가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갈 때는 정책 강도를 높이다가 유가가 내려가면 그 추진력이 약화되는 우(優)를 범하게 되었다. 만약 저유가 시기에 투자를 확대했다면 낮은 비용으로도 우리의 에너지 공급안정성이 크게 강화되고, 국가나 기업 모두 자원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은 우리에게 유가상승 시기는 물론 저유가 시기에도 자원확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심어 준다.

둘째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기 때 그 추진체계를 공고히 다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처음 해외자원개발을 시작한 1980년 초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 약 17년간 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특화하여 전문화하려는 노력을 등한시켰다. 유가에 따라 관심도가 자주 변하여 장기적 관점의 기술 및 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에 소홀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도전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기에만 대처하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성공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공격적인 자세로 임해야 성과가 나온다는 점을 경시하였다.

제 2 장 참여정부 출범과 격변하는 국제 에너지 정세

1. 급등하는 유가, 신 고유가 시대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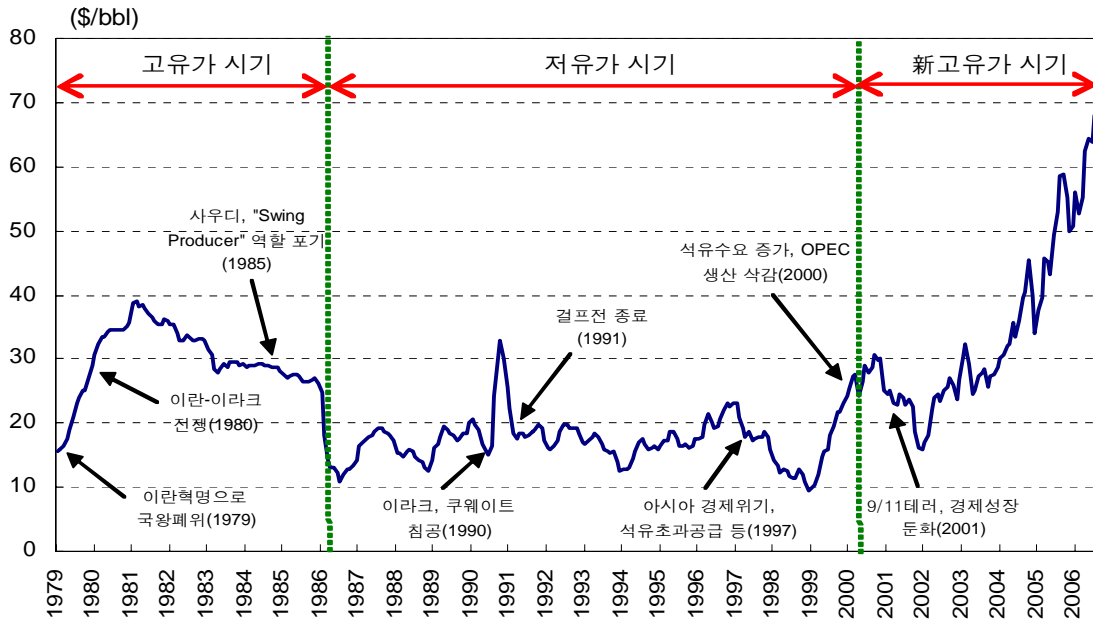
1979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고유가를 유지하던 석유가격은 1986년 초반 10달러 대로 급락하면서 저유가시기가 이어졌다. 1990년 걸프전 때를 제외하고는 1990년대 말까지 10달러대 후반과 20달러대 초반에서 유가가 움직였고, 2000년 초반부터 OPEC의 생산량 감축에 따라 20달러대 후반과 30달러대 초반으로 다소 상승하여 등락을 거듭하기는 했지만 저유가 기조는 계속되었다. 이때 에너지계의 화두는 유가가 아니라 환경문제였다. 1992년 리우에서 150개국이 모여 기후변화협약을 맺으면서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문제를 위협요인으로 여겼다.

그러나 2004년 초 34달러이던 유가가 5월 처음으로 40달러를 넘어섰고 10월에는 50달러를 넘어서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라크 전쟁은 끝났지만 무력충돌로 긴장은 더욱 높아져 갔고, 석유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이 늘어나 원유 생산과 수출 중단 사태가 이어졌다. 이 같은 중동정세의 불안으로 원유공급 차질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생겨나면서 유가는 계속 상승했다.

유가가 급상승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이른바 BRICs 국가들의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에너지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급증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뛰어다녔다. 이렇듯 세계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석유공급은 저유가시기의 투자부진으로 생산력이 낮아져 수요증가를 따르지 못했다. 그 결과 OPEC의 공급여유분이 통상 하루 30만 배럴에서 1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져 국제 정세가 조금만 불안해져도 유가는 매우 민감하게 움직였다.

2004년의 유가상승 현상은 그 뒤에도 계속 악화되어 2006년에는 70달러 선을 무너뜨리며 상승했다. 과거에도 국제정세의 불안에 따라 유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곤 했지만, 이번의 유가상승은 그 파장이나 지속기간이 남다르다. 즉, 산유국의 정세불안도 상승원인 중 하나지만 수요와 공급 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유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 에너지시장에 신고유가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제원유가격 추이〉



주 : 미국 정유사들의 수입원유가격 기준.

자료 : EIA/DOE, 에너지경제연구원

2. 고개드는 자원민족주의

석유와 원자재의 가격상승이 계속되면서 자원보유국들이 자원수출을 자국의 패권강화나 국제 전략적 안보정책과 연계하면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었고, 이런 경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자원산업의 중앙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와의 자원협력을 강화하는 등 자원을 통해 세계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가 자국의 석유 및 가스산업을 국유화하면서 외국 투자자의 지분을 강제로 축소시켜 자국의 국영기업으로 편입시켰다. 이러한 자원민족주의는 러시아의 경우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중남미는 좌파 정부의 집권의 확산에 따라 반미·반 서방 견제의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의 특징은 첫째 로열티와 세금인상 및 외국인 지분감축 등을 통해 자원개발투자로 발생하는 수익 중 외국인 투자자의 몫을 축소시키고 자국의 몫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자국이 가진 양질의 유전이나 자원생산지에 대해 외국인의 접근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50% 이상의 외국인 지분기업에는 전략 유전지대의 입찰을 불허하는 법을 만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대부분의 중동 산유국은 자체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유전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기업의 접근을 막고 있다.

셋째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에 대해 자국의 석유를 개발하는 데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고,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자원개발에 있어 어느 한 나라에 많이 의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에 적절히 배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원민족주의가 우리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자원보유국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고 중앙정부의 힘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기업의 역량이 아직은 국제 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진국 메이저들과의 경쟁을 통해 자원개발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외교전략을 활용하여 자원보유국에 진출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민족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도 첨예하다. 특히 자원폭식에 가까운 중국의 행보는 국제적인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방국가들은 독재국가나 불량국가를 불문하고 거액의 원조와 부채탕감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거나, 자국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무이자, 저금리 융자 특혜를 주는 중국의 행위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약탈(predatory) 행위”로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일본과 인도까지 자원 확보 경쟁에 가세하여 이제는 자원 확보가 단순한 에너지 공급차원이 아닌 국가 간의 안보전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 확보 경쟁은 유전매입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4년만 해도 국제 평균 유전거래가격은 배럴당 4~5달러였으나 2005년 6월에는 15달러까지 상승했다.

제 3 장 본격적인 자원확보 경쟁시대 돌입

1. 결단, 정상 자원외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무렵 북아프리카의 사막지대에서는 중동의 유전과 이를 실어 나르는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 독일과 연합군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졌다. ‘사막의 여우’라 일컬어지는 명장 롬멜의 지휘 아래 독일의 전차부대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전연승을 거둔다. 그러나 전승의 신화를 자랑하던 독일군에게도 패배는 찾아왔다. 연합군은 1942년 10월 23일 이집트 엘 알라메인에서 대공세를 감행한다. 보급망이 무너진 독일군은 필사적인 저항을 해보았지만 최악의 사태에 빠져들게 되고 “모든 장병에게 철십자 훈장을 주겠다. 최후까지 싸우라”라는 히틀러의 명령에 롬멜은 “철십자 훈장보다는 한 대의 전차와 휘발유를 다오”라는 명언을 남기며 퇴각한다. 독일군은 이 전투에서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석유를 장악하기 위한 전투에서 석유가 모자라 패했다고 해도 지나친 비약은 아닐 듯싶다.

제2차 세계대전이 수십 년 지난 지금까지도 각 국은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자원확보에 매달려 왔다. 이는 석유 밸브를 쥐지 못하면 세계의 패권을 논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며, 국가의 흥망이 자원을 확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디 러거(Dick Rugar) 위원장은 2006년 3월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석학들이 모인 가운데 “에너지가 미국 안보에 가장 부담스런 요소이며 특히 석유는 국제분쟁,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키신저도 “국제적인 자원경쟁이 세계분쟁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유가상승과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강대국들의 자원확보 경쟁이 더욱 첨예하게 벌어지면서 자원보유국이나 수입국에게 자원은 국가 안보와 외교전략의 중심축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해서 사용했지만, “자원의 안정적 도

입"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자원의 안정도입이 수동적 자세라면, 자원확보는 능동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자원보유국들과 자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외교 활동을 벌였지만 대부분 통상외교 수준이었을 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라고는 할 수 없었다.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활성화되었을 때도 정부는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전이나 광산을 확보하는 일은 주로 기업의 사업전략에 의존하였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자원외교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오랜 기간의 저유가 시기를 겪으면서 자원의 전략적인 요소들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 상반기부터 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석유수입부과금 감축 등 주로 대내 정책에 역점을 두며 대응하였다. 그러나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중동의 정세혼란, 러시아의 유코스 사태 등 국제 에너지 정세의 혼돈이 지속되자 정부는 유가의 상승기조가 과거와 같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정부는 에너지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동시에, 자원공급 안정정책의 패러다임도 "안정적 에너지 도입" 위주에서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자금과 기술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등 자원개발체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하였듯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도전적 투자영역이므로 보다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자원확보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당시 국제적인 주목을 끌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자원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남미 등을 넘나들고 있었던 것도 자원외교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요 전략으로 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정부로서도 치열한 국제 자원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원외교도 부처 차원을 벗어난 보다 공격적인 정상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원잠재력이 높은 자원부국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이며, 구(舊) 사회주의권, 정

부주도의 자원개발 개도국 또는 자원개발 진출경험이 전무한 국가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외교적 결단은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진출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상외교는 해당 국가의 핵심 인사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협상절차를 단축하거나, 실무협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이를 타개하는 등의 실질적 도움도 가능하다.

자원확보의 핵심전략으로 정상외교 추진방침을 정한 정부는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첫 번째 정상자원외교의 대상지로 정하고, 그해 9월 처음으로 정상외교를 전개한다. 그 후 2006년 5월까지 총 8차례의 대통령 순방외교를 통해 17개국과 자원정상외교를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주요 생산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진출 발판을 마련하였다.

정상외교를 통해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중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자원보유국이면 오지를 마다 않고 정상이 찾아가 자원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의 돌파구를 열어 주었다.

정상 자원외교는 날로 심화되는 자원민족주의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대형 프로젝트의 확보와 한·러 가스협력협정 체결 등 사상 유례 없는 굵직한 성과로 이어졌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역대 최대 호황기를 구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상자원외교에 따라 ▲러시아 서캅카스 유전개발 지분매매계약 및 Tigil/Icha 유전개발 본계약 체결 등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공동개발 합의서 체결 ▲나이지리아 OPL 2개 광구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및 이와 연계한 가스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33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수출 효과 ▲우즈베키스탄 아랄 해 가스 전 생산물분배계약 체결 ▲아제르바이잔 이남 광구 지분참여 독점협상권 확보 ▲베트남 11-2광구 생산시설 준공 ▲몽골 에르디넛 동광 정밀탐사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석유·가스개발의 자원외교 주요성과

국가명	성과사업
러 시 아	- 서캅차카 유전개발 지분매매계약 체결('05. 12.) [지분 감안시 15억 배럴 확보] - Tigil/Icha 유전개발 본계약 체결('05. 12.) 및 탐사중 [지분 감안시 14억 배럴 확보] - 한·러 가스협정 체결('06. 11.)
카자흐스탄	- 잠빌광구 공동개발 합의의정서 체결('06. 9.) [지분감안시 45억 배럴 확보]
나이지리아	- OPL 2개 광구 생산물분배계약 체결('06. 3.) [지분감안시 12억 배럴 확보] - 가스발전소 건설을 통해 33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수출효과
우즈베크	- 아탈 해 가스전 생산물분배계약 체결('06. 8.) [지분감안시 3억 배럴 확보]
아제르바이잔	- Inam 광구 지분참여 독점협상권 확보('06. 5.) [지분감안시 최대 4억 배럴 확보기대]
베트남	- 11-2광구 생산시설 준공('06. 11.) 및 생산개시
몽골	- 에르데넛 동광 정밀탐사 중 ['09년부터 연 3만 톤 생산]

〈참여정부의 정상 자원외교 현황〉

일시	방문국	주요 성과	추진현황
‘04.9	러시아	·서캄차카 유전개발	석유공사-Rosneft 공동개발 MOU 체결 한국측 지분(40%) 매입 완료(‘05.12)
		·엘가 유연탄개발	광진공 - 러, 사하공하국 MOU 체결 한국 컨소시엄(광진, LG, 포스코) 구성(‘05.8)
		·동시베리아 송유관	송유관 협의회 구성(4개분과, 21개사) 후판(1만 톤), 코팅소재(6천 톤) 등 공급
		·한·러 가스협정	2006년 11월 가스협정 체결
	카자흐	·잠빌유전 개발	정상회담시 잠빌·제티수 광구 병합 한국지분(27%) 약정체결(‘05.2)
		·우라늄광 개발	광진공 - Kazatomprom MOU 체결 한국 컨소시엄(광진, 한수원 등) 구성(‘05.7)
‘04.10	베트남	·15-1광구 추가탐사	갈사자(1.2억 배럴, ‘05. 9) 및 백사자(10억 배럴, ‘06. 2) 추가유전 발견
		·11-2광구 매매계약	베트남(PV)과 가스 매매계약(‘05. 4) 및 BP와 수 송계약 체결(‘05. 10)
	인도	·유전개발협력	미얀마 가스전 지분 30% 인도회사에 양도(‘05. 10)
‘04.11	아르헨 브라질 칠레	·브라질 유전개발	SK, BMC 30·32광구 확보 및 사업계획 신고(‘05. 8)
‘05.5	우즈벡	·아랄해 유전개발	중기협 - 우즈벡 국영석유사간 MOU 국제 컨소시엄(석유공사 등 5개사) 구성(‘05.9)
‘05.9	멕시코	·에너지·자원협력	산자부 - 멕, 에너지부 MOU
‘05.12	말련, 필리핀	·에너지·자원협력	석유공사 - Petronas 유전공동개발 MOU
‘06. 3	이집트나 이지알제 리	·OPL광구 PSC계약 ·에너지·자원협력	석유공사 - 나, 석유성간 PSC 계약 체결 자원협력위원회 구성(나:장관급, 알:국장급)
		·알, 석유비축 확대	현행 2백만 배럴 → 향후 6백만 배럴 확대
‘06. 5	몽골 아제르UA E	·INAM광구 MOU ·에너지·자원협력	이남광구 개발 협력 MOU (석유공사 - 아제르 SOCAR) 한·아제르 자원협력위원회 구성
		·몽골 동광확보	오유틀고이 동광에 동반진출(광진, 한전)

① 자원의 보고 카자흐스탄·러시아

참여정부 출범이전 배럴당 30달러 미만이었던 유가는 2004년 3월 배럴당 30달러를 넘기 시작하여 신고유가 시대를 개막하였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04년 9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순방함으로써 본격적인 해외 자원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카스피 해 지역은 21세기 제2의 중동으로 일컬어지는 지역으로서 세계 메이저 석유회사와 중국, 인도 등 각국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하고 있어 진출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곳이다.

각국 국영기업 · 미국 거대민간기업 격전

중국 인도도 송유관 설치하며 경쟁대열 합류 ... 대규모 자본, 장기투자로 승부

카스피해가 '제2의 중동'으로 부상하고 있다. 19세기말부터 개발이 시작된 중동지역의 상유량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세계가 카스피해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의 거대민간석유회사와 주요 국영석유회사들은 이미 대규모 탐구의 행사를 마치고 개발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까지 개발경쟁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석유자원 개발에 그러나 대규모 자본과 장기투자가 필요한 규모와 자본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석유공사 등 국내업체들의 진출이 쉽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석유 철교 '카스피해' = 카스피해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석유개발은 대부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영해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카스피해의 원유 매장량은 390억 배럴 정도. 구소련은 40년대 이후 아제르바이잔지역을 주로 개발, 카자흐스탄에 매장된 원유는 상대적으로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게 많다. 세계가 카자흐스탄 중심의 북부 카스피해의 원유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해상지역에만 약 120억 배럴의 유량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정밀 석유공사 카자흐스탄사 무소장은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시절에는 자원개발의 우선순위에 서지 못했다가 91년 독립이후 세계적인 석유보고로서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메이저급 석유회사의 경쟁지역이 됐다"면서 "개발량의 대부분이 카스피해 인근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카사간, 텡기즈, 카사스가나르 유전 등 북부 카스피해 분지의 일부유전에 몰려있다"고



소개했다.

의 국민들이 91년부터 13년동안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규모는 263억 달러인데 이중 80% 정도가 석유개발관련 투자다. 올해에만도 의 국민들은 9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개발에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 국영석유회사들 대거 출몰 = 미국 메이저급 민간석유회사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매장량이 최소 100억 배럴에 이르는 카스피해의 가장 큰 탐구인 카사간은 이미 미국의 엑손모빌과 툴립스가 16.67%, 8.33%의 지분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최근 9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텡기즈 탐구에서도 셸브론펀사, 엑손모빌이 각각 50%, 25%의 지분을 확보했다. 또 같은 탐구에서 아코는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루크오일과 합작해 지분 5%를 사들였다. 누르솔탄 탐구는 해외 정황에 상응한다.

● 국영석유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제르바이잔의 노르웨이

국영회사인 스타르오일이 차지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국영석유회사인 CNPC와 루크오일은 각각 아르투비 탐구권 90%와 카사스가나르 탐구권 15%를 확보했다. 이탈리아의 국영회사인 아그니프는 카사간 탐구 지분 16.67%를 얻었고 프랑스와 스페인 국영회사인 토탈과 헐솔은 각각 40%와 30%의 지분을 확보했다. 또한 쿠르망가치 탐구와 다진 탐구를 차지했다. ACX 탐구는 영국 국영회사인 BHP가 운영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석유를 개발하고 있다.

메이저 석유회사를 제외한 민간 기업으로는 일본기업인 인메스가 유일하며 카사간 탐구에서 8.33%의 지분을 얻어냈다.

● 인도 중국의 무제한 진출 = 중국과 인도 등도 석유 확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리우 프울쿠루 페르도자이나 인타세(셀자이나오일) 무소장은 "카스피해의 가스도 오일"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빠른 성장에 필요한

석유가 필요하고 카자흐스탄은 해외 판매 루트가 있어야 하므로 올곧게 간섭될 아타수-알라산과 유의 송유관은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이 송유관으로 카자흐스탄의 서부와 남부지역의 석유를 나눌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우 무소장은 전문가의 말을 빌려 카자흐스탄이 중국석유수출로 연간이면 35억 달러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방데다렌호로 석유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고 중국의 석유회사들이 카자흐스탄의 탐구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중국도 카자흐스탄 석유를 탐구하기 위해 가장 큰 석유단지를 올 1월부터 건설하기 시작했고 카자흐스탄의 국경과 가까운 투산지 지역의 정유시설 건설에도 착수했다.

인도의 아스호크 무마르 무케르지 박사는 "인도는 앞으로 지진 연구, 국내의 송유관 건설, 석유생산시설, 가스분배 등에서 카자흐스

탄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갖길 원하며 이를 위해 지난 1월 양국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카자흐스탄과 인도의 협력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9개월안에 이 협력체를 통해 몇 개의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의 경제성을 타진하고 인도의 참여 기회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그 연구결과를 기초로 양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여년 투자해야 열매 볼 수 있어 = 석유개발의 가장 큰 난제는 대규모 투자비용과 긴 투자기간이다. 텡기즈 탐구에는 40여년 동안 200억 달러가 투자돼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카사간 탐구엔 93년 이후 6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카사스가나르 탐구에도 40억 달러의 투자비가 들어갔다.

대부분 10년 가까운 연구기간과 협상, 탐사, 개발에 이어 실제 석유를 생산하기까지는 20년은 족히 걸려야 하고 탐사 이후 시추 성공 확률은 3%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긴 기간과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한 국영기업과 주요 메이저기업들만 석유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출입은행 해외 경제연구소장은 "탐사부터 하는 석유개발은 수조원대의 대규모 자금뿐만 아니라 20여년의 투자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성공확률이 그리 높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며 미국이나 영국의 다국적기업 제외된 나머지 나라들 역시 탐사단계는 정부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사스가나르 오일-엑손모빌 기자
jpark@kssl.com

(내일신문, 2006. 6. 14.)

첫 기착지인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카스피 해 연안의 유망 석유광구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집요하게 요청하였고 결국 카자흐스탄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다.

사실 2004년 3월 제1차 한-카자흐스탄 자원협력위를 통해 유전공동개발 MOU를 체결한 상태였지만, 러시아를 출발하기 몇 시간을 앞두고 쉬콜닉 에너지광물부 장관은 카스피 해 석유광구 개발 의정서(Protocol)에 대해 카자흐스탄 국영석유회사 사장의 반대를 이유로 서명을 미루자고 제안하였다.

우리측은 정상 간 협의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오늘 서명되지 않으면 양국의 신뢰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산고에 산고를 거쳐 결국 러시아로 출발하기 불과 2시간 전,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회사 사장이 양국 에너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카스피 해 석유광구 개발 의정서를 체결할 수 있었다.

한편 카스피 해 잠빌 광구의 경우 탐사 및 개발에 성공하였을 때 우리나라 자주 개발을 상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잠빌 광구는 2006년 9월 제3차 한-카자흐 자원협력위를 계기로 공동개발을 위한 최종실무 협상안에 서명한 상태로 2007년 중에 탐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 잠빌 광구도〉



참여정부의 자원확보를 위한 정상외교의 전형을 마련하다

원래 카스피 해 사업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참여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어, 2002년 3월에 석유공사와 민간 4개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석유공사, SK, LG상사, 삼성물산, 대성산업)하고 산자부와 함께 민관 합동 조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하면서 사업 투자환경 및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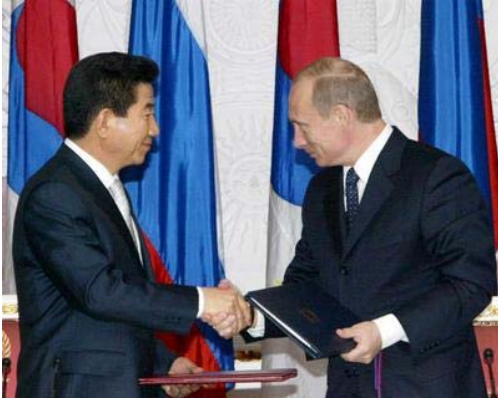
우선 현지회사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카스피 해 전역에 걸친 석유광구자료를 샅샅이 뒤지며 마함베트 지역(현 잠빌광구를 포함한 넓은 지역)이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곳 중에서는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파악되었고, 이를 1순위 진출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우리 측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측에서의 냉대와 무성의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던 중 2003년 8월, 동년 11월 중순에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이 방한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 선언문에는 카스피 해 석유개발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해당 광구에 대해 한국 측과 적극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탄력을 받은 이 사업은 이듬해인 2004년 3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제1차 한·카 자원협력위원회를 계기로 KazMunaiGas와 한국콘소시엄 간에 MOU를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근거로 그해 9월까지 카자흐스탄 측과 해당 지역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2004년 9월 답방 형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스타나를 방문했는데 그때가 두 번째 고비였다. 넓은 마함베트 지역에 있는 4개 광구 중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1개만 골라 가라는 것이고, 우리 측은 적어도 2개 광구를 달라는 입장에서 서로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치 상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에서는 좀처럼 아쉬운 말을 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어려운 부탁의 말을 전했다. 결국 카자흐스탄 측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우리 쪽의 요구를 수용해 2005년 2월 24일 “잠빌 광구”라는 이름으로 우리 측과 기본계약에 합의서명을 하게 되었다.

두번째 방문국인 러시아와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양국 국영석유회사 사장이 역대 최대규모의 대형 광구인 서캄차카 지역의 유전개발 계획에 서명하였다.



한-러 '상호신뢰 포괄적 동반자관계' 격상
정상회담서 10개항 공동선언 채택...
극동 유전·가스전 공동개발 합의

▲ 단독·확대정상회담을 마친 두 정상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서캄차카 자원개발에 대해 집요하게 말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한 그 다음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러시아 국영석유회사(Rosneft) 사장에게 “한국의 노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서캄차카 지역개발에 대해 한국에 독점권을 주고 한국과의 공동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한국 컨소시엄과 러시아 Rosneft 사 간 서캄차카 해상광구에 대한 지분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중 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캄차카 광구는 이때까지 확보한 탐사광구 중 가장 큰 규모의 대형 광구로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러 가스협력협정에 대해서는 양국이 조속히 체결하자는데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2005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정상회의 직전 러시아 측의 번복으로 체결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꾸준히 대화하며 노력한 결과 정상 방문 이후 2년여 만인 2006년 10월 러시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가스협력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동 협정의 체결로 러시아와 가스전 개발 및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스 자주개발을 향상, 안정적 가스수급과 도입선 다변화, 동시베리아 지역 가스전 개발의 교두보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중 한-러 경제인들의 오찬석상에서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의 생산중심지는 우랄산맥 동쪽에서 서쪽인 동시베리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러시아에게 한국은 적절한 에너지파트너가 틀림없고, 우리도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할 만큼 절실하다”고 하며 한-러 간의 자원협력을 강조했다.

첫 정상자원외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대규모 유전광구의 탐사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유전광구 외에도 카자흐스탄에서는 양국이 에너지·광물자원 공동개발사업과 기술정보교류 등 협력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위해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 양국에서의 자원확보를 위한 길을 닦아 놓았다.

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길에서 우리의 해외자원개발의 조직과 자본이 아직 러시아 자원개발에 필요한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국내에서 에너지 투자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국가에너지자문회의가 개최되었고, 이때의 주 의제는 해외자원개발 체제에 대한 것이었다.

② 아시아 전통 우방인 인도 및 베트남과의 자원협력 가속화

2004년 두 번째 정상자원외교 대상국은 베트남과 인도였다. 2004년 10월, 인도를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의 제철소 건설과 철광석 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한국과 인도 양국은 제3국에서의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대우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미얀마 A-3 광구에 대해 인도 측이 일정 지분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인도 측이 탐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인도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석유·가스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해외 자원개발이 확대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우리와의 협력이 절실했던 것이다. 대우는 동 MOU 체결을 계기로 가스전 개발에 필요한 유망 수요처를 확보하고 탐사의 상당 부분을 인도 측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미얀마 가스전 개발의 수익성을 향상시켰다.



인도 46억弗플랜트 수주 협상

韓·印정상,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합의

12월초 FTA 첫 공식회의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낮(한국시간 오후)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반도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구축을 공자포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관련기사 A4E

이회복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인도간 경제협력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약 10건의 플랜트 수주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결핵으로

는 46억달러 상당"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특히 수교 30주년을 맞아 인도 국빈 방문기간에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양국관계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새롭게 규정하고 양국 정부와

의회, 정당간 고위인사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포괄적인 경제파트너십, 이천바 세파(CEPA, FTA보다 포괄적 개념) 협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나차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한·인도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첫 공식회의를 오는 12월 초 열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2008년까지 100억달러 교역 목표를 목표로 경제협력 증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특징 정보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 분야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분야를 결합시켜 제3국 시장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스리랑카 의

최정당간 고위급 인사 교류 및 정부 분야 협력 △인도 안중·평화 및 남북관계 △지역협력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 등 30여 개 항목에 합의하고 '행사사업 공동조약'과 '범외인 인도조약' 서명식에 임석했다.

구체적 경제협력 사업으로는 대우 인터내셔널이 인도 국영석유공사인 국영가스사와 미얀마 가스전 공동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포스코가 추진중인 오리사 제철공장 건설사업도 상당한 진척을 보였으며, 건설지 제조장비 수출 중소기업인 세명애베너지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도의 마살 파워발전플랜트(1.1억 800만달러) 규모 리플랜트제 제조공장 건설 수주 기념협약서를 체결했다.

뉴델리(인도) / 순택기자

(매일경제, 2006. 10. 6.)

인도에 이어 베트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천득령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번 정상방문 수행을 계기로 한-베트남 자원협력 MOU를 체결하고 유전개발, 원전건설 등의 분야에서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때도 정상자원의외교의 위력이 절실히 나타났다. 당시 석유공사는 2002년에 베트남 현지에서 가스전 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석유공사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사업은 막바지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석유공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으니 그것이 바로 베트남 정부의 정부보증(Government Guarantee and Undertaking)이었다.

정부보증이란 외국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선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투자자가 계약으로 정해진 일정 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것인데 베트남 사업의 현지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정부보증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석유공사 측은 수십 차례 정부 관료들을 만나 설득하였고, 정부 간 협의체인 한-베 자원협력위원회에서도 정부보증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지 및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만장일치에 익숙한 베트남의 사회 체제상 예민한 사안에 대해 정부에서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정상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길이었다. 정부는 정부보증 건을 한-베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켜 베트남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마침내 이를 수락하였다. 4년여의 시간 동안 흘렸던 열정과 노력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 롱도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 11-2 광구는 우리 자본과 기술로 해외에서 상업적 탐사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가스전 개발사업으로서 한국석유공사 등 한국 컨소시엄은 이후 2005년에 가스매매 및 수송계약을 체결한 후, 2006년 11월 17일 생산시설 준공식을 개최하고 일일 평균 가스 2,900만 톤, 초경질원유 4,200배럴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한국 첫 해외가스전 드디어 불 뿜다

석유공, 베트남서 하루 2900t 생산

14년이 걸렸다. 한국 최초의 해외 가스전(田) 개발사업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한국석유공사는 1992년 5월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베트남과 계약하고 베트남의 봉파우 남부 해상 280km에 있는 11-2광구 탐사를 시작했다.

서울시 면적의 2배 정도 되는 광구에서 가스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탐사 8년 만인 1998년에야 가스가 발견됐고 2003년에는 이 가스가 상업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드디어 이날, 가스 생산설비가 현대중공업에 의해 완공됐다.

산업자원부는 이 11-2광구 내 롱도이 가스전의 본격 생산에 맞춰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석유공사는 "이 가스전은 한국의 해외 석유개발 국제 경쟁 입찰에 참여해 광구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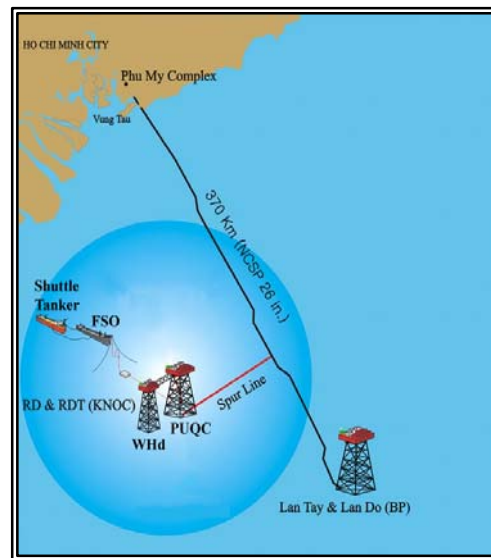
한 권리를 취득하고 탐사 단계부터 국내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광구는 천연가스 1900만 t과 2300만 배럴의 초경질유가 매장된 중소규모. 석유공사(39.75%)와 LG상사(11.25%) 대성산업(6.9%) 등 한국 측이 총 7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23년간 하루 평균 2900t의 가스와 4200배럴의 초경질원유가 생산된다. 가스 생산량은 한국 하루 소비량의 5% 수준이며 초경질원유는 2000cc급 승용차 약 3만 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산된 가스는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베트남 봉파우 인근 푸미공단 가동에 필요한 전력 생산 연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은 이 광구에서 나오는 가스 등으로 23년 동안 5억 달러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하노이=김선우 기자 subtime@donga.com



(동아일보, 2006. 11. 18.)

③ 미개척지 남미 3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에 자원외교 본격 가동

2003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자원가격 상승세와 중국의 공격적인 해외자원 확보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국내외적으로 자원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자원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 번째 대상지를 남미지역으로 택해 2004년 11월 남미 3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정상순방에 나서게 되었다. 특히 남미는 동, 철 등 금속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세계적인 광업 메이저 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자원분야의 전략적 요충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상순방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었다.

〈남미 3개국 순방일정〉

아르헨티나 공식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04년 11월 14일 ~ 11월 16일 · 주요방문내용 : '21세기 공동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 자원·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브라질 국빈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04년 11월 16일 ~ 11월 18일 · 주요방문내용 : 한·브라질 자원협력약정 체결
칠레 공식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04년 11월 18일 ~ 11월 19일 · 주요방문내용 : 한·칠레 자원협력 강화추진(광물자원협력위 설립)

남미시장 진출 터잡기 유전등 에너지협력도

韓·브라질 정상회담 성과

한·브라질 정상회담은 우리에게만 아직은 '잠자는 시장'으로 남아 있던 남미대륙에 시장 개척의 길을 열어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브라질(9백만) 있고 파루라=노우랑 대통령은 17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러시아, 인도,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역량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풍부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4개국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올해 러시아, 인도를 각각 다녀왔다.

특히 브라질은 인구와 국토가 각각 세계 5위인 남미 최대시장이며, 해상왕 기준으로 흑연(세계 2위) 주석(세계 4위) 철광석(세계 4위) 등을 가진 자원부국이다. 미국 골드만 삭스는 2008년 보고서에서 2050년이 되면 브라질이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미주개발은행(DB) 가입, 한·남미 공동시장(메트로수트)간 무역협정 공동연구 등을 아틀레나 브라질을 통한 남

미 진출에 탄력을 불었다.

○자원수급, PPs 진출=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간 장관급 자원협력위원회와 통상협력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 인·관할총 투자사실단을 보내기로 제안했고, 플라 대통령은 환영했다.

자원협력과 관련해, 포스코(POSCO)는 내년부터 10년간 철광석 1억(20억달러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LG나코는 올해말부터 2011년까지 매년 6만t(5000만달러 상당)의 동광석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SK(9는 브라질 동부해안 캄포스 해상봉지에 있는 2개 중구 입찰자로 선정돼 약 39000만배럴의 추정 매장량을 확보했다. 한국석유공사는 브라질 국영 석유사와 유전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 중남미 석유시장에 뛰어올랐다.

특히 브라질 인·관·프로젝트(PPPs) 사업은 한국기업의 중흥기를 경험해 기술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PPs 사업은 브라질이 2007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에 645억달러, 2010년까지 석유산업 인프라 구축에 536억달러를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중국이 이미 30억~30억달러를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중간 자철한 경쟁이 예상된다. 브라질리아=박주호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루이스 에나시우 플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17일 오전(한국시간) 대통령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행사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브라질리아=본

“정치역정 닮았다” 개인사 되짚으며 애기꽃

회담 이모저모

노대통령·플라 시가 함께 피며 교감

노무현 대통령은 루이스 에나시우 플라 다 실바 대통령은 17일 오전(한국시간) 정상회담에서 작은 시가(꽃)를 함께 피우며 '기반과 역경, 정치적 실패'를 겪은 정치적 동질감을 진하게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중학교 2학년때 학생잡지에서 브라질리아에 대한 소개가 나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말을 꺼냈다. 플라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말한 2학년(1959년)은 나는 일지

를 구하면 시골이었다"고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했다. 플라 대통령은 빈민가에서 태어나 7살 때부터 형제들과 땅콩·오렌지 농사를 했고, 15살때 생산공장에서 일했으며, 18살때는 공장에서 시가로 세가운가라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정치과정은 비슷해 각별히 진근감을 갖고 있다"면서 "플라 대통령이 나보다 1년 먼저 태어났고 정치행보도 조금 앞선 것 같다"고 언급을 표시했다. 플라 대통령은 "(금융노조위원장을 거쳐) 처음 노 동지정(PF)을 만들어 유세했을 때 정치연설이 아니라 노조대표 연설 같았다"고 말해 회담장에 웃음이 터졌다. 이어 두 정상은 안대희식을 공유하기면서 정치경력 얘기를 나눴다. 플라

대통령은 국민안전에서도 "노 대통령은 변호사로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변호했고, 나는 노조지도자로 활동해 같은 투쟁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간적인 호감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플라 대통령을 상대로 "한국기업 세입자에 협을 바란다. 노 대통령은 중국의 브라질 대교도 투자를 의식한 듯 '큰 자본을 가져와 군량해주시'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한국기업은 성실하게 하고, 교만하지 말고 어디를 지배관할하는 것보다도 투자의 나라의 국민과 문화를 존중할 줄 안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기업에 하는 투자가 브라질경제 가장 이익이 크고 성공확률이 높 것"이라며 기업자금을 유인했다. 브라질리아=박주호기자

나라	인구(백만)	면적(km²)	교역규모(2003년)	1인당 GDP(2003년)
브라질	192,700,000 (세계 5위)	8,511,770 (세계 5위)	1212억달러	2882달러
러시아	144,000,000 (세계 9위)	17,098,242 (세계 1위)	2108억달러	3029달러
인도	109,850,000 (세계 2위)	3,287,467 (세계 7위)	1113억달러	558달러
중국	137,850,000 (세계 1위)	9,596,961 (세계 3위)	8612억달러	1091달러

(국민일보, 2004. 11. 18.)

순방기간에 아르헨티나·브라질과 자원협력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칠레와는 제1차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미 3개국과 정부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브라질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철광석 1억 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8억 달러 상당의 동광석을 도입(18만 톤/년)하기로 하였으며, 브라질과 총 3.6억 배럴의 원유광권을 계약하는 등 민간기업 간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 관련기관 간 기술협력 및 공동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져서 대한광업진흥공사-아르헨티나 광업청 및 칠레 Cochilco, 지질자원연구원-아르헨티나 지질조사소

(SEGEMAR), 석유공사-브라질 Petrobras, 에너지경제연구원-칠레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각각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에너지 자원 주무부 장관을 각각 만나, 양국 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발굴하기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을 다짐하였으며, 칠레에서는 에너지·자원 Business Dialogue를 개최하여 양국 민간기업 CEO들 간 투자활성화 협의 및 상호 간 애로해결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 등 남미의 주요 자원부국과 에너지자원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간 공식 협력채널인 자원협력위를 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對) 남미 지역 자원협력채널(페루·칠레·아르헨티나·브라질)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남미 지역의 자원개발 진출이 점차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A-B-C 순방 대 C-B-A 순방의 결과는?

당시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아르헨티나(A), 브라질(B), 칠레(C) 순으로 전개된 중남미 정상순방을 순방국가의 순서대로 A-B-C 순방이라 일컬었다. 우연히도 우리가 다녀간 며칠 후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우리의 역순인 칠레(C), 브라질(B), 아르헨티나(A) 순으로 순방하였다. 당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채택한 A-B-C 순방과 중국이 채택한 C-B-A 순방 중에서 어느 쪽이 효과적이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공세가 오히려 상대국에 부담을 주어 우리 측이 실리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④ 유전 및 우라늄 개발의 새로운 기회, 우즈베키스탄과의 자원협력 추진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주요 선도국가 중 하나이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2,6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원유의 가채 매장량이 6억 배럴이고, 천연가스는 세계 10위 생산국이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 중 금, 우라늄 등 광물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다.

우즈베키스탄이 우리의 자원전략지역으로 부각되었으나 제도적 환경이 불안해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정부 간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진출기반을 구축해야 했고, 특히 정상들 간의 회담을 통해 양국의 실질적인 자원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과의 자원협력 강화를 위해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추진되었다. 국가원수로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이후 11년 만에 양국의 정상외교가 추진된 것이다. 순방기간 동안 석유공사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은 우즈베키스탄 국영 석유사인 Uzbekneftegas와 유전개발협력 MOU를 체결하여 신규 유전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중기협의 참여는 해외자원개발에 관심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유전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었다.

광물자원 분야에서도 자파드노 금광 및 잔타우르 우라늄 광산 등에 대한 공동탐사 및 개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업진흥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지질위원회와 MOU를 체결하였다. 지질자원연구원도 우즈베키스탄 지질위원회와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개발참여에 필수적인 우즈베키스탄 지질광물자원 자료의 DB화 및 디지털 종합지질도 작성, 지질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활용한 유망지질대도출 등 광물자원을 분석·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상순방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및 자원협력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관계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정상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자원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자원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한국-우즈베키스탄 자원협력 강화

10일 노 대통령-카리모프 대통령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밤(한국시간)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우즈벡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최대인구(2600만명)를 자랑하는 중앙아시아 역내 선도국가로 꼽힌다. 또한 에너지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시장가능성 등 경제적 잠재력이 큰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더구나 우즈벡은 한국을 미리 중일과 함께 5대 중점외교국으로 선정할 정도로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는 노 대통령의 우즈벡 국빈방문을 계기로 '자원·에너지 협력' 등 실질협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가나에프 우즈벡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사회보장협력' 및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지원 약정'을 서명하고, 이회법 산자부 장관과 아지모프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자원개발 협력 약정' 및 '섬유협력 약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중기협이 앞장 서 석유협정 체결 = 이날 양국간에 체결될 각종 협정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석유공사·중소기업중앙회와 우즈벡 국영석유사(Uzbekneftegas) 사이에 체결되는 아랄해 지역 유전개발협력 약해각서.

현재 이광재 의원이 관련된 유전개발 의혹 사건으로 국내에서는 의미를 축소시키는 분위기지만 관계자들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다. 산업자원부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우즈벡 미탐사 지역에 대한 유전탐사·개발에 공동 노력키로 함으로써 카자흐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규 유전개발 참여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가 MOU 당사자로 참여했다는 점. 애초 우즈벡측으로부터 이 사업을 제안받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정부 및 석유공사 등의 민관합동 유전개발조사단을 구성해 방문하는 등 그동안 우즈벡 정부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시킨 결과, 양해각서 체결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고려인 동포에게 자금심을 =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노 대통령의 우즈벡 국빈방문을 계기로 '고려인 동포 자금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현재 우즈벡에는 전체 인

구의 1%인 약 20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독립국가연합(CIS) 중 최대 규모다. 그러나 현재 우즈벡 내 고려인들은 △사회적 위상 저하 △경제적 기반 상실 △교육수준 저하 △인구 감소 △한국어에 대한 관심 저하 등의 문제 등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우즈벡 방문에 앞선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의 우즈벡 방문을 계기로 산업연수생 1000명을 고려인 동포에게 특별 배정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 동포들의 자금심을 높이고자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스크바 =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내일신문, 2005. 5. 10.)

⑤ 아메리카 대륙의 경제관문, 멕시코와 협력 확대

멕시코는 2004년 총 교역액이 34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 제1의 교역파트너이자, 무역 흑자가 25.8억 달러로 중남미 최대의 무역 흑자국이다. 동시에 멕시코는 중남미 최대의 석유생산국이며 광물자원도 풍부한 지역이다. 그러나 양국간의 교역량이나 멕시코의 풍부한 자원에 비해 국내 기업의 에너지/자원분야의 투자 및 진출은 매우 부진하여 멕시코로부터 연, 동, 몰리브덴 등의 광산물을 18.8백만 달러 규모로 수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시점에서의 정상 순방은 향후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국 정부는 상호 간 경제 및 자원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물자원협력약정, 무역구제기관협력 MOU 및 에너지협력 LOI를 각각 체결하였다. 특히, 광물자원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한-멕시코 간 광물자원협력 강화를 위한 자원협력위를 구성(수석대표: 실장급)하여 광물자원분야 교역 및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상호 합의하였고, 그 밖에도 광업진흥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이 멕시코 지질

조사소와 각각 광물자원 개발협력 MOU를 체결하여 향후 양국간 자원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⑥ 동남아시아의 중심국, 말레이시아의 자원협력 가속

말레이시아는 비동맹회의(NAM)·이슬람회의기구(OIC) 의장국이자 아세안의 실질적 주도국가로서 동남아 시장에 대해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다. 석유와 함께 주석(1백만 톤, 세계 2위), 회토류(3만 톤, 세계 6위), 이트륨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의 국영석유회사인 Petronas는 전체이익 중 해외사업 수익이 1/3을 차지할 만큼 해외자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어서, 우리 기업과 해외 자원개발 진출에 전략적 파트너가 될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석유공사와 Petronas 간에 석유산업 분야 협력 MOU 체결을 우선 추진하였다. 양 공사는 동 협력체결을 통하여 아시아·아프리카·러시아 지역 등 전 세계 육해상 광구 공동개발 프로젝트 협력 등 석유 공동개발 사업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지질자원연구원과 말레이시아 광물청 간에 지질조사 협력 MOU를 체결하여 말레이시아에 다양하게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지질자원 정보DB 구축, 지하수자원 분석·개발, 산업원료광물의 부가가치화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필리핀은 성장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인구 8천3백만 명)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동남아시아의 중심국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이 큰 시장이었다.

필리핀에서는 한전이 추진해온 세부(Cebu) 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하여 한국 전력 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필리핀 전력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 간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하여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였다.

韓-필리핀 “에너지협력 강화”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5일(이하 현지시간)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자원·IT·전력분야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양국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과 아로요 대통령은 이날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경제협력의 구체적 방안으로 ‘에너지 협력약정’과 ‘광물자원 협력약정’을 체결. 광물 자원을 공동개발하고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관광·문화·교육·산업연수 등 분야에서의 인적교류 증가가 양국간 상호 이해와 실질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자국의 상대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양국 외교장관간 이뤄진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과 ‘GSO 도로확장 및 준설사업 시

양국정상, 광물자원 공동개발 협정약정 체결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왼쪽) 대통령이 15일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악수하고있다. /마닐라=연합뉴스

행약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엔 체결된 사회보장 협정은 국내 영세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에

서 고용된 필리핀 근로자는 필리핀 사회보장제도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마닐라=권구천기자 chans@sed.co.kr

(서울경제, 2005. 12. 16.)

⑦ 24년 만에 대아프리카 정상외교로 자원확보 교두보 마련

2006년 3월. 노대통령은 24년 만에 아프리카 지역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 중앙아, 동남아, 그리고 남미 등 12개 자원부국과 연환(連環)되는 자원외교의 결정판으로서 북부아프리카의 지도국인 이집트와 OPEC의 아프리카 회원국인 나이지리아 및 알제리를 방문함으로써 향후 대아프리카 자원외교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미 중국은 2004년 국가주석 후진타오의 대아프리카 정상외교를 통해서 각종 원조 형태의 정책적 지원책을 동원한 미개발 자원 확보 경쟁에 불을 붙인 바 있다.

나이지리아 방문에서 노대통령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미비했음을 상기시키고, 향후 대아프리카 지원 협력에 대한 정책 대강을 발표하였다. 이니셔티브는 단순히 자원 확보 차원의 협력관계만을 모색하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의 자원부국들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유전 한두 개를 확보하려는 낮은 차원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 관계 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만 진정한 그들의 협력,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안정적 자원 공급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중일 아프리카 개발지원 각축

노 대통령 '한국 이니셔티브' 발표

나이지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대아프리카 원조계획인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2008년까지 정부 개발원조(ODA)를 연간 1억불 수준으로 3배가량 늘리고 3년간 1000명의 아프리카인을 초청해 연수를 시키는 등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의료보건의 개선, 농수산업, 정보화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11월경 '한·아프리카 포럼'을 창설해 아프리카 15개국 정도의 각료급 인사들을 초청해 개발경험을 교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핵심적인 개발자원을 검토하겠

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1위라는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돼 있는 빈곤과 개발지원을 위해서 나름의 책임을 감당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아프리카 특수문제 해결'이 21세기 국제사회 주요과제로 제시된 것은 지난 2000년 유엔 천년정상회의.

이러한 내용은 2001년 '천년 개발목표(MDGs)'를 통해 보다 구체화됐고 이후 국제사회는 그 달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공여국은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35% 이상을 아프리카에 집중지원해 왔다. 특히 중국, 일본 등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아프리카 개발지원에 관한 외교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앞으로 3년간 100억불의 경제지원을 하겠다



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노무현 대통령과 오바산조 대통령이 10일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협정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종팀 기자

고 발표한 바 있고 일본은 3년간 3만명의 아프리카인을 초청해 훈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93년 이래 약 100억불을 지원했고 내년까지 대아프리카 ODA를 2배로 증대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노 대통령의

'한국 이니셔티브' 발표는 아프리카 시장개척이라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 한·아프리카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부자·나이지리아=차명진 기자 yjcha@

(내일신문, 2006. 3. 10.)

자원보유국들은 자원개발과 플랜트 건설을 국가의 중요한 전략과제로 생각하고 정상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2006년 3월 나이지리아 정상 방문시 확보한 20억 배럴 규모의 2개 해상유전개발권은 정상자원외교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공사와 한국전력은 2005년 8월 유전개발사업과 발전사업을 연계하는 이른바 패키지형 동반진출 카드를 활용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유리

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경쟁국 기업이 끈질기게 나이지리아 정부를 설득함에 따라 전세는 급격히 역전되어 정상방문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나이지리아 언론은 개발권이 경쟁국 기업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을 통해 상황은 극적으로 다시 반전된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전력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하려는 나이지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계약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정상외교가 없었다면 협상은 계속 지연되거나 공전했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경쟁국 기업에 빼앗길 수도 있었다. 실로 정상외교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韓·나이지리아, 20억배럴 유전 개발

성공시 우리측 12억배럴 원유 확보 ... 발전소·가스관 공사도

양국 석유평사 계약체결

한국석유평사와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회사는 9일(한국시간 10일 오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20억배럴 규모의 나이지리아 서부대서양해상광구 유전 2곳을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지난해 8월의 가계약에 뒤이은 것으로, 나이지리아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오바산조 대통령의 정상회담장에서 이뤄졌다.

황두열 석유평사 사장은 "2006년부터 탐사에 들어가 유전개발 성공 시 지분의 60%인 12억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게 된다"며 "양쪽의 투자비

회수를 빼고 순이익만 우리 몫으로 2억4000만배럴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매장량 20억배럴은 한국의 연간 총석유소비량의 2년 6개월치에 해당하며, 한국 몫의 순이익은 2억4000만배럴, 12조원(배럴당 50달러 기준)에 달한다.

나이지리아 유전사업은 한국 발전사업의 현지 진출과 연계해 확보한 것으로, 에너지산업이 함께 진출하는 '한국형 해외 자원개발 모델'의 첫 번째 성공사례라고 산업자원부는 설명했다. 발전사업은 향후 225만kw 규모의 발전소와 1200km의 가스관

로를 건설하는 공사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한국의 나이지리아 에너지 개발사업



2010년에는 나이지리아 전체 전력의 20%를 담당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10일(한국시간 10일

오후) 양국의 경제인 300명을 초청한 한·나이지리아 경제인 간담회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원과 협력 계획을 담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공식 발표했다.

한편 노 대통령을 수행 중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나이지리아 교통부 장관과 교통 관련 건설시장의 정보 교환을 위한 '교통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최근 수주 협의를 진행 중인 15억달러 규모의 현지 철도 개·보수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아부자(나이지리아) =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한국경제, 2006. 3. 11.)

또한 우리나라도 패키지형 유전개발로 나이지리아 광구개발이 성공하면서 이러한 전략을 한국형 해외자원개발 진출전략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6년 2월 자원개발 기업과 플랜트, IT 등 해외수출 기업들로 구성된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아프리카 순방에서 노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이집트와 더불어 아프리카의 3대 석

유부국인 알제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정부 간 협력 채널로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광업부 간의 자원·에너지 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석유공사와 알제리 국영석유회사는 국내 석유비축시설에 2008년까지 공동 비축원유 물량을 6백만 배럴 규모로 확대한다는 협정을 맺고, 한국가스공사와 알제리 국영석유회사는 알제리 가스 개발 산업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 한국전력과 알제리 전력공사는 태양광 발전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 기업들의 마그레브(북서아프리카) 지역 진출에 알제리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제, 2006. 3. 13.)

韓-알제리 ‘전략적 동반자관계’ 합의

양국 정상회담... 에너지개발등 협력 양해각서 체결

알제리를 국빈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오후(이후 한국시간) 알제리 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과 기술, 알제리의 풍부한 자원과 숙련된 인력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알제리의 유전·가스전 등 에너지개발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

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관련 장관들이 에너지·자원협력 협정과 가스협력, 태양광발전 협력, 석유공동 비축 확대, 건설분야 협력, 주력도시개발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실제 알제리-한국전기 기사 drens@ard.co.kr

아프리카는 이제 머나먼 오지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전수해 줄 것이 있는 협력자이자 우리가 얻어 올 것이 많은 전략적 동반자임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아프리카의 자원부국들이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될지 여부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을 결합한 한국형 동반진출 자원개발 모델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데 달려 있다.

산고에 산고를 거듭했던 나이지리아 석유광구 계약

2005년 8월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측 컨소시엄은 나이지리아의 해상광구 OPL321과 323광구를 낙찰받았다.

이 광구는 추정매장량이 20억 배럴로 우리나라 2년간 석유소비량보다 많은 초대형 광구로 당시 국제입찰에 붙여져 엑손모빌 등 세계 유수의 석유회사들이 광구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인도같이 높은 값을 불러 과감하게 베팅하기도 어려웠으며, 메이저들같이 기술력이 높은 것도 아니어서 국제입찰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나이지리아가 전력이 부족한 점을 간파, 석유공사와 한전, 포스코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부와 합동으로 오바산조 나이지리아 대통령 측을 설득하여 225만 kW급 가스발전소와 1,200km의 가스관을 건설해 주는 대신 광구탐사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제안하여 나이지리아 측을 움직였다. 처음으로 시도한 석유개발과 플랜트를 연계한 전략이 주효한 것이다.

우리 측은 발전소 등 플랜트 건설을 대가로 지분비율에 따른 우리 측 광권투자비 3.2억 달러중 0.9억 달러만 지불하고, 나머지 2.3억 달러는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이지리아 측은 난색을 표시했으나 수개월간의 지리한 협상 끝에 오바산조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2007년 9월까지 발전소건설이 가시화되는 조건으로 2.3억 달러 지불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모든 협상조건이 완결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는 2006년 3월 9일 양국 정상 앞에서 본 계약의 서명식을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 방문 이틀 전인 3월 7일 나이지리아는 우리 측에 2.3억 달러를 면제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나이지리아 재무부에서 이미 전체 투자비 4.9억 달러를 세입예산으로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급해진 우리 측은 황두열 석유공사 사장이 직접 나이지리아로 날아가 우리 측에 우호적인 나이지리아의 석유부 에드먼드 다우코르 장관(OPEC 의장 겸임)에게 S.O.S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다우코르 장관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나 나이지리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가까운 막후실력자와 연결되어 다음날 아침 7시 오바산조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잡아놓았다.

새벽에 귀국한 석유장관에게 면담시 동석하여 도와줄 것을 요청해, 석유장관과 함께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측은 당초 약속대로 2.3억 달러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바산조 대통령은 한술 더 떠 한국 측과 같이 투자

한 인도 ONGC의 광권투자비까지 합쳐 4.9억 달러를 모두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대신 그 돈은 escrow 계정에 넣어 나이지리아도 쓰지 않고 있다가 발전소사업이 가시화되면 면제금액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더욱 난감해진 우리 측은 왜 우리가 인도 측 것까지 지불해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오바산조 대통령은 한국이 운영권자이니까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인도로부터 그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컨소시엄 사 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바산조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 측의 답변을 재촉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든 것이다. 답변을 유보하자니 바로 다음날로 예정된 서명식이 차질을 빚어 정상외교가 영망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오바산조 대통령의 요구를 수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동석했던 석유장관이 보다 못해 “본인과 석유공사가 책임지고 ONGC로부터 돈을 받아낼 것이며, 만약 인도가 못 내면, 다른 석유회사로 대체시킬 것을 약속하겠다”며 인도분의 지불을 유예해 달라고 설득했다. 석유장관의 얘기에 오바산조 대통령도 뒤로 물러나 인도 측 금액의 지불은 없었던 것으로 하였다.

대통령궁을 떠난 우리 측은 인도분의 금액은 해결했지만, 당초의 면제금액 2.3억 달러의 지불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난감한 상태였다. 더구나 당장 현금 2.3억 달러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현지 대책회의를 열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찾아냈다. 즉, 2.3억 달러는 어차피 escrow 계정으로 들어가 나이지리아도 못 쓰는 돈이니까, 그 돈은 standby LC를 열어 나이지리아측에 지불을 보증하는 안이었다. 즉, 현금 지불 대신 은행의 지급보증서로 대체하자는 안이었다.

이 안에 대해 나이지리아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석유장관이 재무장관과 함께 전화로 장시간 설득하면서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2.3억 달러의 현금지불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다음날 정상들 앞에서 나이지리아 광구계약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비록 하루 만나질 동안 일어난 일이었지만 우리 측으로서는 내내 진땀을 흘려야 했던 영원과도 같이 긴 시간이었다. 한편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나이지리아 측의 이 같은 행위 뒤에는 경쟁기업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져, 자원확보 경쟁이 얼마나 냉혹한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⑧ 참여정부 정상 자원외교의 다변화 - 몽골, 아제르바이잔, UAE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은 자원확보를 위한 전방위 외교의 일환으로서 ‘자원외교의 다변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카스피 해 연안 석유, 가스의 서유럽 공급 시발점인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매장량 70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은 10억 9천만 톤에 달하며, 2차 대전 무렵 러시아 석유 생산의 95%, 전 세계 석유생산의 50%를 담당했던 바쿠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자원이 풍부해 그 국명의 의미가 “불의 나라”라는 뜻을 담고 있다.

노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순방을 통해 산업자원부는 아제르바이잔 산업에너지부와 포괄적 자원·에너지 협력약정을 맺고 정부 간 자원협력 채널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석유공사와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는 추정매장량 20억 배럴에 달하는 이남광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협상권을 확보하였다.

한국전력과 아제르바이잔 전력공사는 전력분야 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아제르바이잔과의 정상자원외교는 에너지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플랜트 수출 등 다방면에서 양국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20억배럴 카스피해 유전개발 참여

한·아제르바이잔 정상회담 이남광구 공동 개발 MOU

중동·러시아에 이은 세계 3대 에너지 자원 매장지인 카스피해 유전개발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16면
아제르바이잔을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카스피해 유전개발 공동개발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두 정상은 지난 92년 수교 이후 첫번째 정상회담을 가

(서울경제, 2006. 5. 12.)



진 뒤 자원·건설·정보기술(IT) 등 각 분야의 협력 증진방안을 담은 '한·아제르바이잔 관계와 협력의 원칙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측이 카스피해 중남부에 위치한 이남(Irbil) 유전광구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석유공사와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SOCAR)간에 체결했다. 이남 광구는 추정 매장량 20억배럴에 달하는 대형 광구로 세계 석유 메이저사인 영국 국영석유회사(BP)와 미국의 셸이 각각 25%, SOCAR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양국은 또 이날 이남 광구 공동개발 협력 MOU를 포함해 에너지자원·건설·IT 등 7개의 MOU 및 협정을 체결하고 상대국에 특명전권대사가 부임하는 상주 대사관을 연내 개설하기로 했다.

/바쿠=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원유도입국인 UAE는 중동의 물류·금융·관광허브로 부상한 두바이를 중심으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93년 이래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 왔다. UAE 방문은 에너지를 장기

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협력기반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정상 회담을 계기로 체결하기로 한 원유 공동 비축사업 양해각서를 통해 비상시 우리의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크게 확대시킬 기회를 가졌다.

중국과 러시아를 관통하는 지리적 요충지이며, 우리나라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광활한 초원의 나라 몽골은 유연탄 매장량 세계 5위, 형석 매장량 세계 3위 등 세계 8대 자원부국이다. 몽골방문을 계기로 산업자원부와 몽골 연료에너지부는 몽골의 풍부한 풍력 및 태양광 활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광진공-LS니꼬-MAK 사(몽) 간 몽골 광물자원개발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유연탄과 희귀 광물 등 우리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의 공동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북아 이웃국가로서 '공동의 이익' 도모, 한·몽골 정상회담...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키로

▲ 노무현 대통령과 남바린 엔흐바야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 양자 간 자원협력, 전략적 활용

자원확보를 위한 숨 가쁜 정상 자원외교와 더불어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자원협력위원회는 1970년대 제2차 석유과동 이후 자원외교기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자원보유국과 에너지자원분야의 교역, 합자투자,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등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주요 자원보유국 등과 양자 간 협력위원회를 설치, 운

영하고 있는데 동위원회는 정부 간의 협력 채널로 상호교환 형식의 연례 정기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원-원 전략의 일환으로 자원보유국은 유망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우리는 자금이나 기술을 투자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이 있는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상대국에는 고용창출이나 인프라 개발, 관련 산업의 교역 확대 등을 제공하고, 우리로서는 주요 산업원료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원-원 효과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전략적인 자원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자원협력위원회를 아시아, 중남미 등 거의 전 대륙에 걸쳐 18개국들과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종전 7개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하였다. 25개 국가의 석유매장량은 전 세계 석유매장량 중 44.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세계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하였다.

특히 참여정부 이전에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자원협력위원회를 맺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는데 참여정부 이후 브라질, 칠레, 콩고, 알제리 등 양 대륙에서 12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2006년 중 14개국과 자원협력위를 개최함으로써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켰다. 과거에는 자원협력위원회를 자원관련 정부기관 간의 단순 교류채널로 활용하여 왔으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실질적인 자원협력을 추구하여 프로젝트 근간의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지향하여 왔다.

과거의 단순한 교류협력의 장이라는 기능을 발전시켜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정보수집의 창구로서 활용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시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채널로서 활용하려는 전략적 목적에 따른 것이다.

【협력채널】 7개국과 자원협력위 → 18개국 신설(총25개)

지역	참여정부 이전	참여정부 이후 신설국가
아시아	인니, 베트남, 몽골	필리핀, 미얀마, PNG
러시아·CIS	러시아, 카자흐	우즈벡, 아제르바이잔
중남미	-	브라질, 칠레, 아르헨, 멕시코, 페루
아프리카	-	콩고, 알제리, 나이지리아, 앙골라
중동 등	사우디, 호주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UAE

자원협력위원회 구성현황(2006년말 현재)

지역	국가	설치년도	지역	국가	설치년도
아시아	인도네시아	'79. 9	러·CIS	러시아	'92. 5
	베트남	'01. 2		카자흐스탄	'02.11
	몽골	'92. 5		우즈베키스탄	'05. 5
	필리핀	'03. 6		아제르바이잔	'06. 5
	미얀마	'05. 4	아프리카	콩고(DRC)	'05. 3
대양주	호주	'80. 2		남아공	구성합의
	파푸아뉴기니	'06. 7		알제리	'06. 3
중남미	브라질	'04.11		중동	나이지리아
	칠레	'04. 6	앙골라		'06.10
	아르헨티나	'04.11	사우디아라비아		'99.10
	멕시코	'05. 9	오만		'05.11
	페루	'03. 2	카타르		'06. 4
			쿠웨이트	'05.11	
			UAE	'06. 5	

① 세계 최대의 자원부국 러시아와의 협력

2005년 7월 제주도에서 우리 측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과 러시아 측 산업에너지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제6차 한-러 자원협력위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양측 대표가 한-러 가스협력협정에 가서명함에 따라 협정 체결을 가시화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006년 10월 우리 측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과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러 가스협력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한-러 가스협력협정은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시 합의 이후, 2년여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제6차 회의 때는 실무대표 간 가서명까지 한 바 있으나, 러시아 측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번복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극적으로 타결하였다. 양국은 2006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한-러 양국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산자부 이원걸 제2차관과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마테로프(Materov) 차관 간 한-러 가스산업 협력 협정을 최종 서명하게 되었다.

② 신흥 유망지역인 카스피 해 자원부국과의 자원협력

<카자흐스탄과의 자원협력>

2004년 3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우리 측 산업자원부 장관과 카자흐 측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제1차 한-카자흐스탄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석유공사와 카자흐 국영석유회사(KazMunayGas)는 카스피 해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광업진흥공사도 카자흐스탄 지질위원회와 광물 자원 공동조사에 합의하였다.

2005년 4월 양국 에너지자원주무부처 장관 주재로 서울에서 제2차 자원협력위를 개최하였다. 이는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양국은 카스피 해 잠빌광구 공동개발 협력 MOU를 진전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우라늄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데도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2006년 9월 산자부 장관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를 방문하여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 제3차 한-카자흐스탄 자원협력위를 개최하였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시 합의 이후 2년여 동안 진행해온 잠빌광구 실무협상을 최종 타결함으로써 최종 본 계약 체결을 가시화하였다. 또한 우라늄 장기도입계약 및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다.

<카스피 해 자원협력의 전략적 요충지, 아제르와의 협력>

2006년 8월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를 방문하여 제1차 자원협력위를 개최하였다. 제1차 자원협력위에서는 정상순방시 한국석유공사와 아제르바이잔국영석유회사(SOCAR) 간 체결한 '이남유전광구 공동개발 MOU'의 후속 조치 문제를 집중 논의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냈다. 또한 아제르 측이 IT,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및 우리기업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양국은 전력분야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우즈베크와의 협력>

2006년 3월, 우즈베크 카리모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직전 우리 측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과 우즈베크 측 대외경제투자통상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제1차 한-우즈베크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5월 정상방문 후속조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랄 해 가스전 탐사사업의 생산물분배계약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③ 아시아 자원부국과의 자원협력

<에너지 자원협력의 베스트 파트너, 베트남>

2003년 6월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과 베트남 공업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자원협력위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베트남 15-1, 11-2등 석유·가스전 및 일반광물 프로젝트, 전력·원자력 분야 협력강화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2005년 4월 우리 측 산업자원부 차관과 베트남 측 공업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제3차 자원협력위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기업들이 운영권사로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 11-2 광구의 가스공급계약 체결 협력을 이루었고, 베트남 원전건설 수주를 놓고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분야 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2006년 11월 베트남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자원협력위를

개최하였다. 우리 측은 베트남 11-2 광구 성공을 필두로 향후 베트남 사업에 우리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였다.

<세계 10대 자원부국, 몽골과의 자원협력 확대>

2003년 6월 서울에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국장과 몽골 상공부 지질광물자원국장을 수석대표로 제3차 자원협력위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에너지·광물자원분야 민간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협력기초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4년 5월 울란바토르에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국장과 몽골 산업무역부 지질광물자원국장을 수석대표로 제4차 자원협력위가 개최되었다. 몽골은 전력 부족난을 겪고 있어 양국은 전력기술 인력에 대한 발전 및 송·배전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12월 과천에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과 산업통상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제5차 자원협력위를 개최하였다. 동 자원협력위에서는 몽골에서 다량 수입 중인 제철용 원료인 형석제품을 다양화하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육로수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 9월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과 몽골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6차 자원협력위가 몽골에서 개최되었다. 울란바토르 외곽 100만 평의 부지에서 30kw급 태양광 발전과 100kw급 풍력 발전을 위한 복합설비를 건설하고 솔라(Solar) 가로등 등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파크를 조성하기로 양국이 합의하였다.

<필리핀 라푸라푸 동광산 생산 본격가동>

2006년 11월 산업자원부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차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광진공이 추진 중인 라푸라푸 동광개발 사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신규 유망 프로젝트 공동 발굴과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합의하였다.

<전통적인 자원협력국가, 인도네시아와 민간기업 진출 협력>

2003년 7월 서울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및 인도네시아 광업에너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0차 한-인니 자원협력위가 개최되었다. 인니 측은 입찰예정인 신규 석유·가스광구에 대한 소개를 실시하여 우리 측 기업의 투자를 희망하고, 석유·가스, 유연탄 및 금속광 등 14개 사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2005년 10월 제21차 자원협력위가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인니산 LNG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하였으며 인니 신규석유탐사광구(NEM-III)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2006년 12월 정상순방의 첫 번째 방문국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및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2차 자원협력위가 개최되었다. 동 자원협력위에서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 삼보자 지역에서 1,700만 톤 규모의 신규 유연탄 광구를 확보하여 11.28일 인니 정부로부터 광구개발 허가권을 획득하였다.

<우리나라 최대 광물자원협력 파트너, 호주>

2004년 2월 산자부 자원정책실장 및 호주 산업관광자원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제20차 자원협력위가 광양에서 개최되었다. 동 자원협력위에서는 국내 절차가 완료된 '한·호 자원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호주 측 절차 완료를 촉구하였다.

2005년 7월 호주 캔버라에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및 호주 산업관광자원부 에너지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제21차 자원협력위가 개최되었다. 동 자원협력위에서는 한국 동해심해지역 대륙붕에 대하여 호주 Woodside사와 한국석유공사 간에 공동평가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2006년 9월 한국에서 산자부 에너지자원개발 본부장 및 호주 산업관광자원부 자원국장을 수석대표로 제22차 자원협력위가 개최되었다. 동 자원협력위에서는 호수에 진출중인 한국 주요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광업진흥공사와 SK가 호주 Cockatoo 유연탄광 개발에 참여(지분 15%)하도록 하였다.

④ 중남미 자원개발을 위한 진출

<남미 지역 최초의 자원협력 파트너, 페루>

2003년 7월 페루 리마에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국장과 페루 에너지광업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제1차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페루 8원유광구 및 코스타벨트 동광산 등 우리 기업들이 페루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양국이 협력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산자부 자원정책실장과 페루의 에너지광업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제2차 자원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동 자원협력위에서 마르코나 동광 탐사, 페루 56광구, LNG 사업 등에 대해 페루 측의 협조 의사를 받았다.

<자원의 보고 브라질>

2005년 5월 서울에서 산업자원부 장관과 브라질 광업에너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제1차 자원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04년 양국정상 회담시 합의한 전력분야 협력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브라질 국영전력공사 간에 전력분야 협력 협정서를 체결하고 화력발전소 건설, 송전, 발전소 운영 등 분야에서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하였다.

<최대 동 생산국 칠레와의 자원협력>

2004년 1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산자부 자원정책국장과 칠레 광업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제1차 자원협력위가 개최되었다. 동 자원협력위에서 지질자원연구원과 칠레 국립광업지질조사소간 칠레 광물자원 부존현황에 대한 분석 및 D/B 구축 연구사업을 공동 추진기로 합의하였다.

<신규 자원협력 기회의 확대>

2006년 6월 멕시코시티에서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과 멕시코 경제부 광업차관을 수석대표로 제1차 자원협력위가 개최되었다. 양국은 공동 탐사개발프로젝트 발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광진공이 자원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남미 선도국가 아르헨티나와 자원협력 추진 - 제1차 한-아르헨티나 자원협력위>

2006년 6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과 아르헨티나 광업담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제1차 자원협력위가 개최되었다. 양

국은 아르헨티나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의 유전 탐사개발 프로젝트(RMO 광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3. 새로운 자원개발 전략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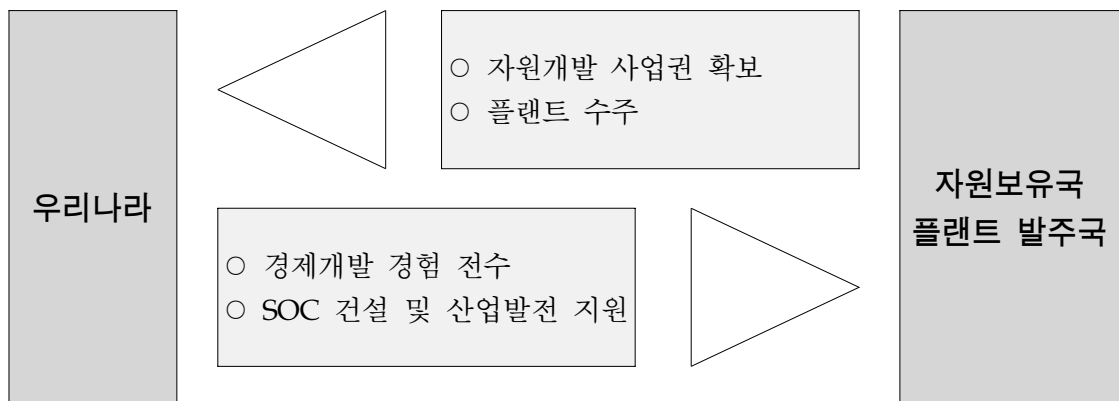
대부분의 후발 산유국들은 풍부한 자원개발과 동시에 부족한 인프라(에너지, 도로, 통신 등) 확충을 패키지로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 정치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집권자의 정치기반 안정, 민심확보 등을 위해 에너지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선, 플랜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 등의 부문에서 세계 일류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보유국의 여건과 우리 에너지 산업 강점을 전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자원개발 경험부족 및 메이저 기업 미보유 등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전력·가스 등 에너지 플랜트 수출의 경우 국내 관련산업(엔지니어링, 설비, 부품·소재 등)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해당 국가의 추가 자원확보를 위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자원확보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자원보유국이 원하는 것을 제공(Give)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취하는(Take) win-win 방식의 해외진출 모델이 효과적이며 자원확보와 플랜트 수출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 패키지형 해외진출전략 모델 〉



이와 같은 전략으로 정부는 에너지산업과 타산업 간의 해외자원개발 동반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2006년 2월 석유공사와 한전 등 14개 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에너지 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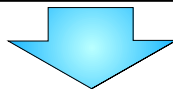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통해 2006년에 나이지리아(2.10~19) 및 아제르바이잔(4.10~15)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과 “INAM 광구 석유개발 협력 MOU” 체결을 협의하였다.

또한 캐나다 오일샌드 사업참여 지원을 위한 “Oil Sands 공동연구 Working Group” 구성에도 합의하고 캐나다 오일샌드 공동사업 조사를 위한 T/F를 출범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였다.

2006년 3월 우리나라는 나이지리아에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적용하여 전력 사업 투자와 연계하여 10억 배럴 규모의 초대형 유전에 대한 탐사권을 획득하였다. 또한 2006년 11월에는 나이지리아 철도현대화 사업과 생산유전 지분 매입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 에너지산업 동반진출 전략 및 실적 >

- 단순 지분 참여나 메이저와의 공동 입찰 방식과 차별화 전략 시도
- 다른 산업분야와의 연계를 통해서 신규 광구를 확보한 최초의 사례로서 해외 자원개발의 신(新) 모델 제시



- 플랜트 수출과 연계하여 나이지리아 대형 심해광구 (약 10억 배럴 규모) 낙찰 성공(05. 8. 26)
 - 10억 배럴 매장량은 국내 연간 석유소비량의 1.3배
 - 우리 기업이 운영권을 보유, 심해광구 운영 기술 확보 가능

이에 따라 정부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효과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에 국한된 사업분야를 IT, 건설 등 기타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국가별로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패키지형 동반진출 유형별로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유형별 패키지형 동반진출 시스템 구축〉

동반진출 유형	구체적 사례
① 에너지 이(異)업종 간 동반 진출	【나이지리아】 유전(석유공사) + 발전소(한전)
② 자원확보 및 관련 플랜트 진출	【베트남】 유전(석유공사) + 플랫폼 건설(현대)
③ 동일 업종 내 원료·가공산업 진출	【인도】 철광석(POSCO) + 제철소(POSCO)

한편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과 함께 기존의 다다익선의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전략거점을 선정하여 전략적인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 인력 등 제한된 투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접근전략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각 광종의 매장량이나 개발 유망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대상국들의 투자여건이나 인프라,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석유공사를 통해 생산유전 및 운영광구를 보유한 지역, 탐사광구의 석유발견에 성공한 지역,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호르무즈 해협을 회피하면서 국내 반입이 용이한 지역, 신규 매장량 잠재력이 큰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핵심전략거점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전략 선정 기준에 따라 원유도입이 용이한 러시아 동부지역, 매장량 잠재력이 큰 카스피 해 지역, 중동 및 아태지역이 포함된다. 특히, 중동 의존도 저감 및 도입의 용이성 측면에서 러시아 동시베리아 및 사할린 지역은 매우 중요하다. 카스피 해와 중동은 석유매장 잠재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이미 우리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통해 석유개발 기반을 마련한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지에서는 기존 경험과 협력관계,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추가 사업기회를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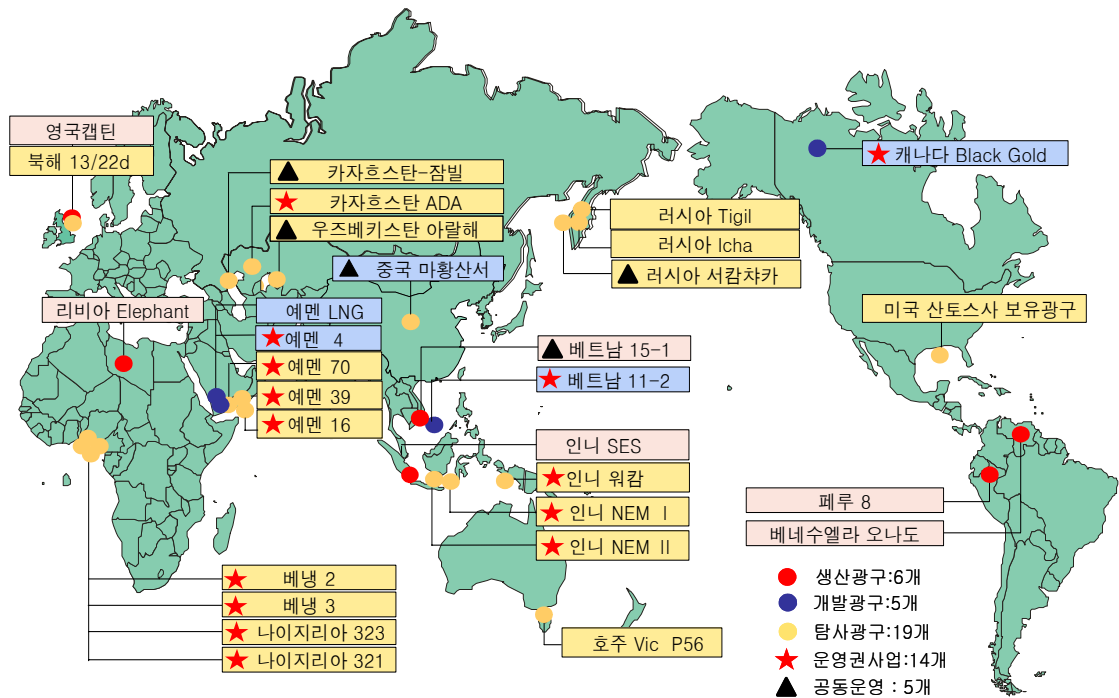
핵심전략 거점
지역선정기준

- 생산유전 및 운영광구 보유 지역
- 탐사광구의 석유발견 성공 지역
- 탈호르무즈전략에 따른 국내반입이 용이한 지역
- 신규 매장량 잠재력이 큰 지역

핵심전략 거점
지역

- 동북아시아 거점 : 러시아 사할린
-서캄차카, 사할린 등
- 동남아시아 거점 : 인도네시아
-인니,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등
- 중동 거점 : 두바이
-예멘, 이라크, 카타르 등
- 서아프리카 거점 : 영국 런던
-나이지리아, 베냉, 영국 등
- 카스피 해 거점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리 등
- 미주 거점 : 미국(캐나다)
-캐나다, 페루, 베네수엘라 등

< 석유개발 핵심전략 거점별 사업추진 현황 >



자원외교, 시스템과 전략, 그리고 인간의 결합

외교란 교섭이며, 교섭은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원외교도 해당 국가들의 관계자 간 접촉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외교적 교섭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 자원외교의 주 대상국은 개발도상국들이어서 제도보다는 인간관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관계의 형성”은 자원외교의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관계의 형성, 그리고 자원개발 사업협상은 모두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자원외교를 추진할 당시에는 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무현 대통령도 자원외교를 추진하면서, 아쉽지만 그 성과는 참여정부 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참여정부에서 시동 걸어 추진한 자원외교의 정책들이 차기 정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땀과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자원외교의 시작과 함께 자원개발정책의 현장에서 실무를 진두지휘했던 이원걸 당시 산업자원부 차관(현 한전 사장)은 “자원외교는 대통령이 가고, 장관도 가고, 실무자도 가면서 계속 이어지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자원외교의 핵심인 ‘관계’의 형성도 전략적으로 추진해 자원보유국의 정책담당자나 자원개발 실무진들과의 초청 및 교환,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아직 우리나라와 경제 및 외교관계가 긴밀하지 못한 자원보유국가에 오랜 기간 살아서 그곳 실정을 잘 알고, 현지인과 깊은 인맥을 맺고 있는 우수한 우리 교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그는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편한 길을 갈 수 없고, 편한 길을 찾아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대부분 저개발국가인 자원부국은 정치적, 제도적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메이저 석유회사 또는 중국, 인도 등 경쟁국에 비해 자금력, 기술력이 열세인 우리 기업들은 바로 이 점을 오히려 진출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특히 최근 메이저 기업들에게 장애요인으로 등장한 자원민족주의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원개발사업과 플랜트, IT 등 우리의 산업강점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전략이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며, 기술적 강점이나 문화적 강점, 그리고 인적·물적자원들을 전략화하여 자원개발을 확대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제 4 장 해외자원개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1. 전략과 추진체계의 재구성

가.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전략 논의

2004년 유가가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자 에너지 가격관리, 절약과 효율개선 등 수 세적인 국내 시장대책에서 해외 자원을 직접 확보하는 공세적인 대응책으로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을 새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에너지 문제를 국가적인 아젠다로 상정하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에너지법들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기본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 방침을 정했다. 다만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그 중간과정으로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열어 에너지대책을 다루기로 하였다.

2004년 11월 3일 에너지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국내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산자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산자부는 참여 정부 임기 내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능력 기반을 확충 하겠다는 해외자원개발추진전략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광종에 대한 자주개발목표를 상향조정하고 ①핵심 에너지자원 부존지역에 대한 개발 참여 본격화 ②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투자재원 마련 ③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는 조직역량 강화 ④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참여지원 강화 등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내세웠다.

제1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는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는데 전문가들의 연구를 거쳐 차기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학계와 연구소 및 기업의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Task Force(TF)를 구성하고, 자원개발 전문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2005년 3월 11일 개최된 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는 그동안 TF가 연구한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자원개발전문기업은 합병 등 인위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대형 전문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반 여건을 마련하고 가장 경쟁력을 갖는 기업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대형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다만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경우 정부 재원 부담, 공기업 비효율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또 해외자원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자금을 해외자원개발 사업 유인할 수 있는 유전개발펀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연구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산자부는 바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석유공사 혁신 TF와 유전개발펀드 TF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 수립을 착수했다.

제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는 2005년 9월 28일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석유공사 혁신 TF와 유전개발펀드 TF가 연구한 안들을 보고하고 토의하였다.

석유공사 혁신방안에서는 비축 등 석유공사의 공적 기능 외에 자원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정부는 석유공사의 개발부문이 체제를 갖추는 때까지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해 나가는 단계별 추진방안이 제시되었다.

유전개발펀드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펀드에 대해 조세특례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정부가 실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해 유전개발펀드가 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2006년 하반기에는 제1호 유전개발펀드가 나오도록 하는 추진안이 보고되었다.

또 3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자원개발과 전력설비 투자의 동반 진출 성공사례 등 에너지산업 해외 진출방안이 논의되었다.

2006년 5월 19일 개최된 제 4차 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에너지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과제와 전략에 대한 종합 검토가 있었다.

나. 새로운 해외자원개발 목표를 제시

정부는 2001년 제1차 해외자원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국내 산업에서의 중요도와 수입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전략 광종'을 선정하고 방향성과 집약성을 통해 구심력을 갖추기 위해 각 광종의 '자주개발 목표'를 수립하였다.

자주개발이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여 직접 생산하는 자원으로서 자원안보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의 석유의 자주개발률은 선진국이자 석유수입국인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자주개발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주요국 자주개발률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자주개발률(%)	4.1%	9.8%	54%	95%	44%

* 2005년 기준, 단 일본은 2003년 기준, 이탈리아는 ENI 사, 프랑스는 Total 사, 스페인 Repsol사 기준으로 자주개발률 계산(자료 : 각 사 연보, IEA)

2004년 수립한 제2차 해외자원개발계획에서는 참여정부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종전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도입”에서 “적극적인 자원개발”로 전략수정을 반영하여 당초 1차 계획의 목표치에서 석유(10→15%), 아연(20→40%), 유연탄(30→35%), 철광석(10→20%), 희토류(5→10%) 등으로 자주개발률을 상향 설정했다.

2차 해외자원개발 계획의 7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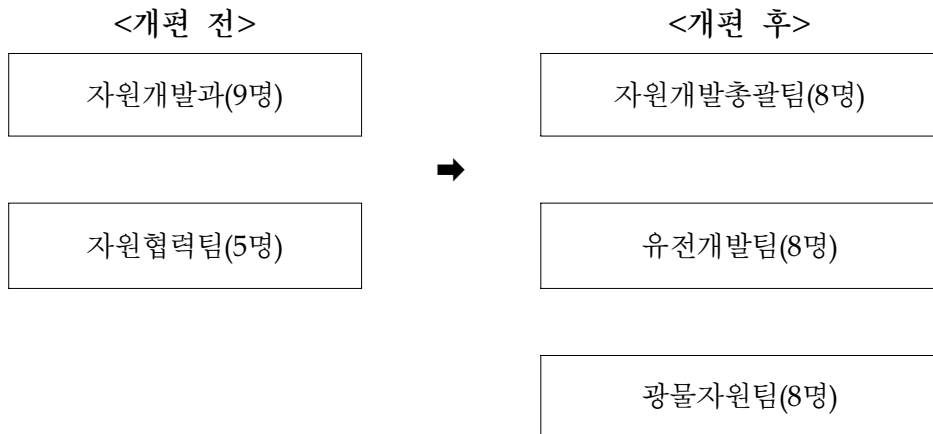
	2차 계획년도 수립시 자주개발률 (%, 2004년)	자주개발 목표(2013년)		1 차 계획의 목표 (2000년)
		자주개발률(%)	자주개발물량(연간)	
석유	4.1%	15%	135만 배럴	10%
가스	4%	30%	8.1백만 톤	30%
유연탄	26%	35%	31.5백만 톤	30%
우라늄	-	10%	500톤	-
철광석	5%	20%	8.6백만 톤	10%
동광석	7%	20%	230천 톤	20%
아연광	38%	40%	456천 톤	20%
희토류	4%	10%	760톤	5%

다. 추진체계 강화

정부는 더욱 강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6월 산자부의 조직에서 에너지 및 자원정책을 총괄, 담당할 제2차관제를 신설하고 초대 제2차관으로 이원걸 차관을 임명했다.

2004년 이후 참여정부는 중앙아시아를 시작으로 남미, 동남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17개국에 달하며 지역적으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자원정상외교를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유전 및 광물 개발을 위한 대규모 신규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무와 행정수요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1992년 1국 4과에서 1999년 1개과로 축소된 자원개발 관련 부서를 2005년에는 1과 1팀으로 일부 확대하였다. 그런데도 급증하는 해외자원개발 행정수요와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자원개발본부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자원개발총괄팀과 유전개발팀, 광물자원팀 등 3개 팀을 두게 되었다.



2. 재원조달 방안 수립의 가속화

가. 유전개발펀드의 도입

정부재정만으로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민간부문의 자금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5년 3월 개최된 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는 민간 자금의 자원개발사업 투자유인 방법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토의되었고, 자본시장에서 해외자원개발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적극 검토해 보기로 결정했다.

2005년 4월 산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를 비롯하여 학계, 석유개발기업, 증권사 및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유전개발펀드 Task Force”가 발족되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유전개발펀드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TF에서 검토한 결과 유전개발사업에 펀드를 조성하는 데 많은 장애가 확인되었다.

첫째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은 안정된 투자처를 선호하는 데 비

해 유전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았다. 유전개발 사업은 10년~20년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동 기간 동안 유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환율변동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탐사광구의 경우 평균 성공률이 15%에 불과하고 광구지역마다 그 편차도 크며 성공률 예측도 어렵다.

둘째는 유전개발 사업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방식도 지분투자, 직접투자, 혹은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투자하고, 해외광구 지분 등록은 대표기업만 하는 등 매우 복잡했다. 더구나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는 해외 광구의 지분을 펀드에 매각하거나 담보로 하려면 해외 컨소시엄 사의 동의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개발사업을 일정한 틀에 맞추어 펀드개념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셋째는 TF에서 다소 혼선을 보인 바와 같이, 유전개발펀드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곳은 자산운용사들인데, 이 자산운용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유전개발사업의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더욱이 석유개발기업 역시 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때문에 복잡한 유형의 유전개발 사업을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펀드로 구조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층이 거의 없었다.

넷째는 유전개발펀드가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안정성이나 수익성이 경쟁펀드보다 우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시장에는 증권과 채권 투자는 물론이고 선박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실물자산 펀드 등 다양한 경쟁펀드가 존재했다.

투자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옵션시장 등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전개발펀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이러한 위험회피 기능을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유전개발펀드를 위한 “투자위험보증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유전개발펀드의 투자자와 정부가 “위험(risk)”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즉, 공적위험 부담기관(수출보험공사 등)이 만기 시 펀드 투자자 원금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대신 투자자는 공적위험 부담기관에 일정부분의 수익을 제공하게 된다. 만약 펀드 투자자가 만기 때 약속된 원금부분이 손실을 보면 공적위험 부담기관

은 약정된 손실분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이와 같이 투자위험보증제도에 의해 투자자는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위험 회피 비용으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은 낮아지게 된다. 즉, 고수익·고위험 사업을 안정된 수익과 낮은 위험을 가진 펀드로 만드는 것이다.

유전개발 TF는 이와 같은 제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유전개발펀드 도입안을 토의하고, 그 방안을 수립하여 2005년 12월 정부에 정책실시를 건의했다. 정부는 TF안이 시장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투법은 펀드의 종류를 규정하고, 각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며, 펀드발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등 펀드발행 및 판매자들의 역할과 의무, 금융 당국의 감독방법 등을 방대하게 규율하고 있다.

유전개발에 대한 투자펀드는 실물자산 펀드의 하나로서 현 간투법하에서도 얼마든지 조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전개발펀드를 자주개발 확대라는 자원안보와 연결시키는 것은 현 간투법하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래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유전개발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집어넣어 동 법을 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유전개발펀드가 일반 펀드와 다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법에 해당되는 자원은 원유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원료수급에 중요한 전략 광종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또, 일반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에 펀드 재산의 10%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으나 유전개발펀드는 재산의 100%까지 단일한 해외유전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일반펀드가 10% 이내에서만 차입이 가능한 반면 유전개발펀드는 30%까지 차입이 가능하다.

일반펀드의 자산운용사 설립자본금은 요건이 100억 원 이상이지만 유전개발펀드는 30억 원 이상으로 낮춰졌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원개발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조항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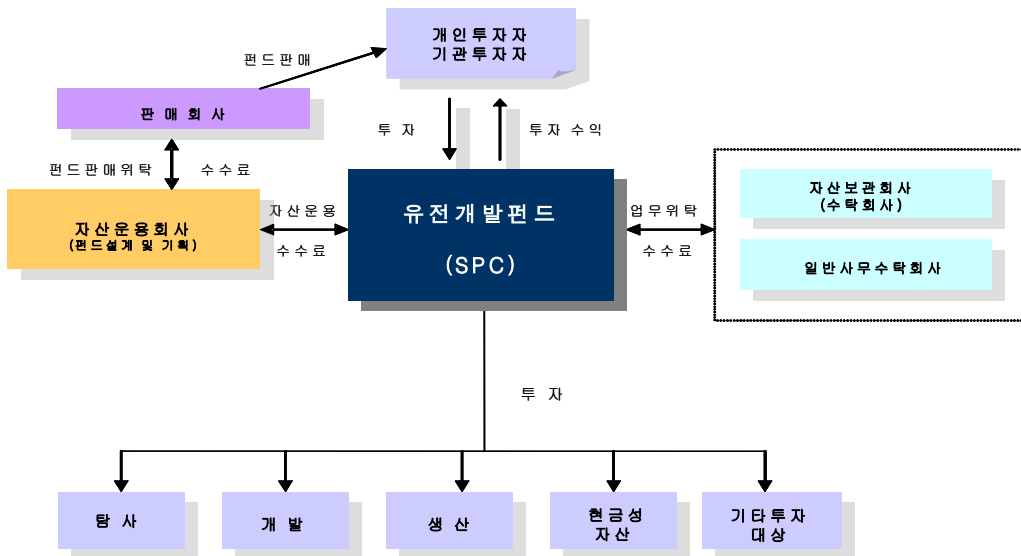
일반펀드와 유전개발펀드 비교

일반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기업 및 투자대상에 제약 없음	국내기업이 투자하는 자원개발사업만 해당
자산운용사 자본금 요건 100억 이상	자산운용사 자본금 요건 30억 이상
동일종목에 10% 이상 투자금지	100%까지 해외자원개발 투자가능
투자회사 재산의 10% 이내에서 차입가능	자본금의 30% 이내에서 차입가능
'간투법'상 PEF는 M&A 목적으로 사용	'해자법'상 PEF는 이러한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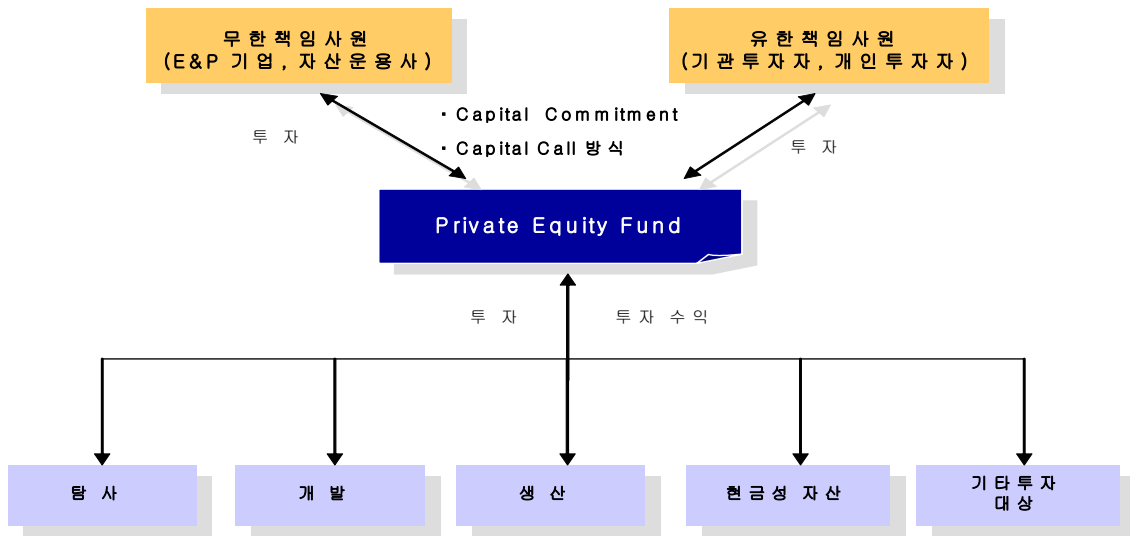
유전개발펀드는 공모형, 또는 사모형으로 조성될 수 있다. 현 간투법의 규정에 따라 펀드의 투자자가 30인 이상이면 공모형, 30인 이하이면 사모형으로 구분된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모형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중심으로 안정도가 높은 개발·생산사업에, 사모형은 소수 전문 투자기관 중심의 탐사사업에 주로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해외자업개발사업법에 사모형 펀드는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로 조성되도록 그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유전개발펀드 구조 (공모의 경우)



유전개발펀드 사모방식 운용구조



또한 유전개발펀드가 투자자를 보다 강력하게 유인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 조항을 두었다. 당초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처 등 세제당국의 반대가 높았으나 해외자원개발 확대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세감면특례법을 개정하여 2008년까지 3억 원 이하일 경우는 비과세, 그 이상의 수익은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이후 2011년까지는 3억 원 이하 수익은 5% 과세, 초과분은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p>【법인세】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비과세</p> <p>【소득세】 '08년까지 : 3억원 비과세, 3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 '09 ~'11년까지 : 3억원 5%, 3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p>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정안」을 2006년 6월 국회 산자위에 상정하였고, 9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유전개발펀드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개정을 통한 유전개발펀드의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자 석유공사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15-1광구를 기반으로 2,000억 원 상당의 유전개발펀드를 조성하여 2006년 11월 29일, 30일 이틀간 시장에 판매함으

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전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가 탄생하게 되었다. 첫 출시된 석유공사의 유전개발펀드는 청약률이 3.12:1이라는 비교적 높은 경쟁률하에서 성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높였다.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 개요

상품명	한국 베트남 15-1 유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상품유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근거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단위형, 폐쇄형
주요 투자대상	회사는 자산의 대부분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베트남 생산광구의 원유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정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투자(이하"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한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의 투자는 회사자산총액의 50% 이상(법률상 요건은 회사 자본금의 50% 이상) 국공채 투자는 회사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투자 ※ 위험회피 외 목적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금액 총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자본금 규모	2,040억원 수준(예상)
예상 만기	5년 3개월(예정)
투자소득의 과세	2008년까지 투자금액 3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3억원 초과금액의 경우 15.4% 분리과세(주민세 포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투자금액 3억원까지 5.5% 저율 분리과세, 3억원 초과 시 15.4% 분리과세(주민세 포함)

나. 정부재정의 확충과 용자시스템의 개선

에너지패러다임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도입”에서 “적극적인 자원개발”로 전환한 참여정부는 7대 전략 광종 중 석유, 석탄을 비롯한 5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을 당초 설정된 목표보다 상향하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전문가들의 추정결과, 2013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유와 가스는 16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 광물자원은 20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12〉 석유·가스의 신규 진출을 위한 투자비 소요 규모

(백만\$)		2005-2008	2009-2013	누계
\$40/bbl	탐사/개발	835	2,770	3,605
	생산매입	4,534	5,966	10,501
	합 계	7,203	9,636	16,840
\$50/bbl	탐사/개발	1,061	3,521	4,582
	생산매입	5,781	7,607	13,388
	합 계	8,675	12,028	20,704
(참고) 기존광구 투자		1,833	900	2,734

주 : 생산광구의 매장량 매입단가는 \$12.0/배럴(유가 40\$시), \$15.3/배럴(50\$시) 로 가정
 자료 : 석유공사 혁신 Task force, 에너지경제연구원,2005

광물자원 투자소요액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총투자	136.8	379.7	497.5	398.8	307.6	295.1	221.7	166.1	152.5	133.4	2,689.1
- 광진	13.6	45.1	87.9	91.4	85.6	100.0	93.5	67.0	31.9	22.3	638.4
- 민간	123.2	334.6	409.5	307.3	222.0	195.1	128.2	99.1	120.6	111.0	2,050.7

자료 : 광진, 2006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자체 자금만으로는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탐사사업은 성공률이 평균 15%에 불과해서 정부의 재정을 통한 성공불용자제도는 탐사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 출범초기인 2003년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에특회계에서 조성된 예산은 2,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지속적으로 정부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주력하였다.

참여정부 들어 자원개발부문의 예산은 이미 다른 예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다. 에특회계 수입 중 자원개발에 대한 예산비율이 참여정부 이전에는 13% 수준이었으나 참여정부 들어서는 16~17%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증액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재정부족사태를 겪었다. 2005년부터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이 크게 증가하자 생산유전에 대한 용자지원이 중단되었고 2006년에는 성공불용자도 규정된 투자자금의 70% 용자에서 40%로 축소

배정되었으며 자원개발 총투자액 대비 정부의 용자지원율도 26%(2004년)에서 16%(2005년)로 크게 하락하였다.

에특회계 중 해외자원개발 예산비중

(단위 : 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
에특회계(A)	22,695	21,068	22,022	19,508	21,965
자원개발 부문예산(B)	2,486	2,758	3,670	3,499	3,869
B/A	11.0	13.1	16.7	17.9	17.6

자료 : 전계서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 재정확대 방안으로 에특회계의 세입원인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수입에 부과하는 부과금을 인상하는 안이 먼저 제기되었다. 에특회계 자체의 자금규모를 늘리겠다는 안이었다. 그러나 유가상승으로 국내 물가가 불안한 시점에서 수입부과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다음으로는 건교부가 운영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일부 자금을 에특회계로 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유류 소비에 교통세를 부과하여 조성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주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관련 SOC투자에 투입되는데 에너지부문으로는 투자되지는 않고 있었다.

산자부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에너지부문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일부를 에특자금으로 배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05년 4월부터 건교부, 산자부, 환경부, 예산처 등 관계부처 1급 및 국장급회의를 통해 교통세의 일부를 에특회계에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에특회계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지원되는 자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이관하고 여유자금을 해외자원개발 등 다른 에너지부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성된 에특회계의 여유자금 중 일부를 해외자원개발 재원으로 활용하

기로 하고 2007년 예산으로 전년보다 73%가 늘어난 9,265억 원을 배정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 용자는 석유와 가스의 경우 석유공사가, 광물자원은 광업진흥공사가 예탁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다시 해외자원개발 기업에 용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용자운영기관이 동시에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이기 때문에 대출자와 용자수혜자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용자절차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심의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임명하도록 하고, 그 후 용자심의위원회를 아예 정부로 이관하여, 용자심의구조의 투명성을 확립하였다.

자원개발 투자액의 정부용자비율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석유 가스	총투자	3,199	371	437	561	642	953	6,162
	기업조달	2,479 (77.5)	312 (84.0)	353 (80.7)	444 (79.0)	485 (75.6)	817 (85.8)	4,889 (79.3)
	정부용자	720 (22.5)	59 (16.0)	84 (19.3)	118 (21.0)	156 (24.4)	136 (14.2)	1,273 (20.7)
일반 광물	총투자	1,571	97	65	89	135	154	2,111
	기업조달	1,163 (74.0)	51 (51.9)	20 (30.6)	37 (41.9)	89 (65.9)	105 (68.4)	1,464 (69.3)
	정부용자	408 (26.0)	47 (48.1)	45 (69.4)	52 (58.1)	46 (34.1)	49 (31.6)	647 (30.7)
합계	총투자	4,769	468	502	651	777	1,107	8,273
	기업조달	3,641 (76.4)	362 (77.3)	373 (74.2)	481 (73.9)	574 (73.9)	923 (83.4)	6,352 (76.8)
	정부용자	1,128 (23.6)	106 (22.7)	130 (25.8)	170 (26.1)	202 (26.1)	184 (16.6)	1,920 (23.2)

자료 : 산업자원부, 2006년

또 예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정부재정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했다. 즉, 위험도가 높아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탐사사업에 정부의 재정을 더 배분하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생산사업에는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다. 수출입은행 자금 확대

해외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입은행(수은)도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크게 신장시켰다. 2004년 약 650억 원 수준이었던 자원개발 금융 지원 조성액을 2006년 2,500억 원 수준으로 증강시킨 것이다.

정부 예산(에특자금)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정된 해외자원개발 지원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소 위험도가 높거나 공적 역할이 큰 사업에는 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개발·생산 사업에는 수은이 적극적인 자원조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융지원 목표

(단위 : 억 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지원목표	1,036	2,500	3,500	4,500	5,500	6,500	8,000

자료 : 수출입은행, 2006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수은은 자원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소요자금의 100%까지 확대하고(여타 자금은 80~90%) 금리를 일반 해외투자 사업보다 0.5~1.0%포인트 인하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도 최장 25년까지 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 원활한 자원개발 사업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은의 자원개발 금융 지원대상을 일부 탐사사업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탐사사업의 위험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주개발률 목표가 설정된 주요 자원개발사업으로서 정밀탐사 후 개발단계 진입이 임박한 탐사사업 중 신용이 양호한 기업이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석유공사·광진공)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제한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은은 구축한 ADB, EBRD 등 국제개발금융기관 및 JBIC(일본), CHINAEXIM(중국) 등 각국 ECA(Export Credit Agency)와의 협력채널을 활용한

대외협상력 제고, 위험분담 등을 위한 협조용자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수은은 ADB 등 6개 주요 국제개발금융기관 및 일본 JBIC 등 19개 ECA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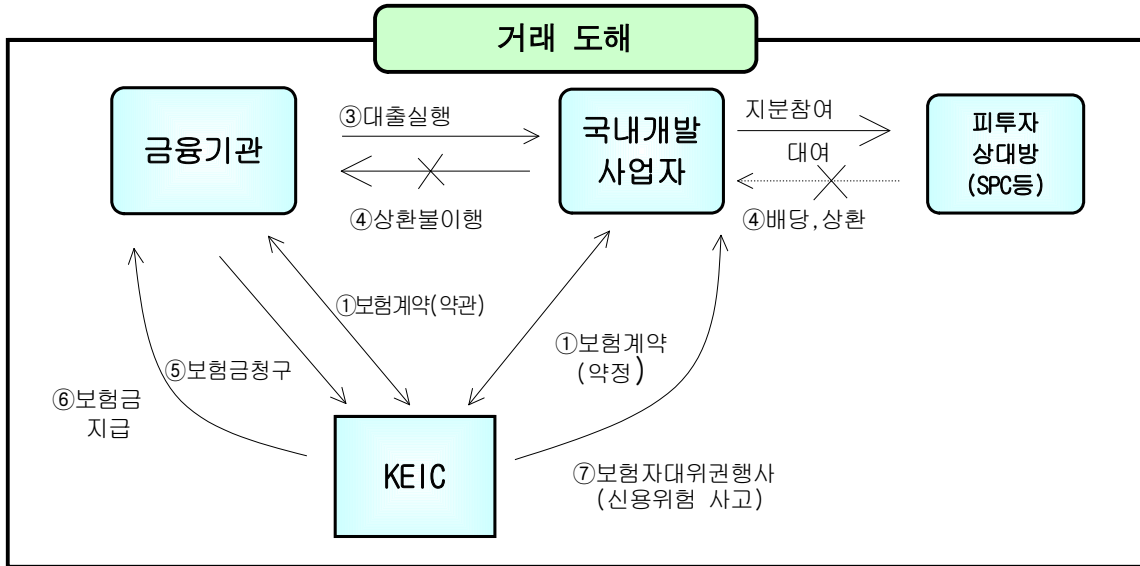
라. 해외투자보험 제도 도입

해외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플랜트 수주 가능성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지원 초기부터 적극적인 연계 지원을 통하여 해외플랜트 수출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신종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수출경쟁력 강화대책회의」, 2005년 6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서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1년여에 가까운 검토와 협의를 통해 2005년 10월부터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제도를 도입했다.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내개발사업자에게 개발 및 생산단계의 소요자금(70% 이내)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주관기관은 한국수출보험공사(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막대한 자본, 고도의 기술, 높은 사업위험 등이 수반되는 거래인 탓에 상업금융기관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한 대출위험 담보를 얻어 국내개발사업자에게 장기·안정적인 금융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은 기존 해외투자보험(주식 등)에서 담보하는 비상 위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종합위험(비상위험+신용위험 : 대출금 미상환 위험) 담보를 통하여 금융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시켰다.



자료 : 수출보험공사

3. 대두되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필요성

가. 자원개발, 전문기업만이 산다

국제 석유개발기업은 크게 ExxonMobil, BP와 같은 슈퍼 메이저와 TOTAL, Repsol과 같은 유럽계 메이저 회사, 그리고 정제설비를 갖지 않고 석유개발사업만 실시하는 상류계 독립회사(Independent)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개발 전문기업은 석유생산 규모가 최소한 30만 b/d로서 기술력 등에서 독자적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상류부문 독립계회사로서 global network를 가진 지역적 메이저(Regional Major)급 기업을 의미한다.

< 전문기업의 모습 >

- 사업구조 : 국내외 유전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독립계 규모의 석유회사
 - * 중장기적으로 상·하류 수직일관 체계 구축도 필요
- 생산규모 : 약 30만 b/d 이상
- 기술력 : 탐사 및 개발/생산을 위한 필요 기술력과 경제성 분석 및 탐사/개발/생산작업 운영 등의 독자적 수행능력 보유
- 인프라 : global network/조직, 전문기술/관리인력 확보

현재 우리나라 석유개발 기업 규모는 세계 40~50위권 독립계 상류기업의 5~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요 국제 석유개발기업 비교〉

	생산량 (천boe/d)	자산 (억\$)	종업원수 (명)	기업 순위
Encanada	796	312	4,090	45
Devon	712	298	3,900	47
Anadarko	590	202	3,300	48
Norsk Hydro	569	331	n.a	49
BG	481	166	5,175	52
Unocal	428	131	6,590	54
국제 기업 평균	596	240	4,611	-
석유공사	46	15 내외	약 200	
SK	35	n.a	25-30	

석유를 비롯한 자원의 자주개발을 통한 자원확보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 자원개발이 비주력인 기업은 사업성이 나빠질 경우 사업을 포기해 안정적인 자원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회사들이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들 중 자원개발사업을 전문업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과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이를 발휘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전문적인 개발회사로 성장하기에는 정부의 지원규모가 너무 작았다. 대부분의 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지분참여나 소규모 광구를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2004년 5월부터 유가가 오르면서 고유가 대책이 석유조세 감축, 에너지절약 강화 시책 등 '국내 대책'에서 '해외에서의 에너지 확보'라는 공세적인 대책이 제기되면서 국내 자원개발 기업역량으로는 메이저 등 국제 기업들과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따라서 우리에게도 국제적인 수준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후 국제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자원개발전문기업으로 자원개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통합,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 관련 공기업과 민간 기업을 모두 통합한 후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 등 백화제방(百花齊放)식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당시 국회 산자위 소속 이광재 의원은 『국제수준의 석유개발회사 육성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2004년 제1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보고하면서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검토해 다음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였다.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국제 석유산업에서 경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업의 규모와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산자부는 학계와 연구소 및 기업의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Task Force(T/F)를 구성하고, 석유개발 전문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나. 전문기업 육성방안의 쟁점

전문기업 육성체제에 관한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국영기업으로 육성할 것인가, 민간기업을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영기업의 장점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금의 확보가 용이하고 대외적으로도 높은 신뢰도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해외자원개발에서는 고수익성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략자원의 안정적 확보도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 주로 단기적인 이윤추구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 및 중단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을지라도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힘들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규모가 상당히 커야 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 더구나 투자회수기간은 긴 반면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영기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경우 국가의 자원개발 정책목표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단기간의 사업성에 관계없이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과 보조에 있어서도 명분상 민간기업보다는 국영기업이 유리하다.

국영기업이 해외자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단점은 민간기업보다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다. 물론 국영기업들도 점차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추구하기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국영기업은 정부정책의 목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경제적 원리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경영상의 경직성이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이 약한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기업의 장점은 국영기업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인 사업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국제적인 석유개발기업들도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의 두 가지 형태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 중 민간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자국에 석유가 풍부한 나라였고, 국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외국에 대한 석유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다.

전자는 미국과 영국계 슈퍼 메이저급 석유회사로서 ExxonMobil, Chevron, BP, Shell 등이고 후자는 메이저급 석유회사로 유럽의 프랑스 TOTAL, 스페인 Resol, 이탈리아 Eni 사 등이다. 한편 유럽계 국영 메이저급 석유회사들은 1990년대 초반에 민영화되었는데 민영화 당시에는 이미 메이저급 석유회사로 성장해 있었다.

일본은 프로젝트가 생길 때마다 다수의 종합상사, 금융기관 등이 회사를 세우는 "one project, one company" 방식으로 해외에서 석유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프로젝트별로 독립적인 자원개발을 추진한 결과, 대형 석유개발회사가 육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지역 메이저급의 대규모 회사인 중핵기업(中核企業)을 육성하기로 정책을 전환하고 각 프로젝트들의 자산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석유개발기업 성장 사례

- 정부주도 국영 석유사 육성
 - 프랑스 : Total(1924) 및 Elf(1965)를 국영으로 설립육성 → 1992 민영화 착수 → 2000 합병
 - 이탈리아 : 1953년 ENI를 설립하여 국영사로 운영되던 AGIP(1926), ANIC(해외, 1935), SNAM(가스, 1941) 등 자회사로 편입 및 대형화 → 1995 민영화 착수
 - 스페인 : Hispanoil(해외, 1965), Eniepsa(국내, 1977) 등 석유부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INH 설립(1981) → INH하의 상·하류 부문을 통합하여 Repsol 설립(1987) → 1989 민영화 착수 → 1999 YPF와 합병
- 민간주도의 진출
 - 독일 : 8개 석유사가 Deminex 설립(1969)→ 1998 Deminex 해산(1997 생산규모 22만 B/D) → 민간사별로 추진(2004년 현재 최대기업은 Wintershall로 29만B/D)
 - 일본 : 민간사별로 추진, 정부는 JOGMEC을 통하여 지원 → 2004년 기업 대형화 추진(INPEX로의 자산통합, 33만B/D)
- 정부 적극적인 지원(석유를 주요 전쟁물자 인식) → 광권확보에 외교력 동원
- 탐사/개발과 함께 M&A 적극 추진
 - Repsol : YPF의 인수가 국제 E&P사로 성장하는 계기
 - ENI : 생산 50만B/D 증가(2000-'04)의 50%가 매입에 의한 것임

다.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다

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2005. 3)에서는 전문기업 육성방안이 보고되었다. 당초 제기된 여러 가지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크게 ① 민간부문 주도 ② 공공부문 주도 ③ 신규공사 설립 등으로 정리를 하고 단순히 규모 확대만을 위해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그 부작용을 고려할 때 곤란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 기존에 제기된 방안 내용 및 문제점 검토 >

구분	① 민간부문 주도형	② 공공부문 주도형	③ 신규공사 설립형
내용	민간이 석유공사 개발부분 흡수	석유공사가 민간사업 흡수 (정부 출자 확대 병행)	석유공사, 광진공 등을 편입한 신규공사 설립
문제점	· 석유공사 매각시, 특혜 시비 · 안정적 사업 추진 불확실 (민간기업 경영권 위협 등)	· 민간 기업은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을 희망	· 시너지 효과 미흡 · 공기업 신설비난 소지

따라서 기업형태를 구분하여 합병 등 인위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자연스럽게 대형 전문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 여건을 마련하되,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대형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서라도 석유공사가 공기업 비효율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전문회사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자원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석유비축사업, 시추선 사업, 정부의 예특자금 관리, 석유개발 융자금 대출운용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특히 석유공사의 자산 대부분은 비축자산으로 당시 석유공사 총 자산의 3.3조 원 중 석유개발 광구자산은 1,400억 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석유공사를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원개발 부문만 특화하는 기업형태가 효율적이지만, 분리시에는 자산의 축소로 소기업으로 전략해 해외에서의 경쟁이 용이하지 않은 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의 전문회사 육성방안에 관한 논란이 일었는데 대통령은 “석유공사 개발부분이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추어질 때까지 정부가 관여하고, 이후에는 공기업화 하여 민간과 경쟁해 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해 나가는 큰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어서 석유공사 혁신 T/F가 구성되어, 석유공사의 전문기업 육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석유공사 육성방안별 비교〉

구분	개발 자회사 설립	현 석유공사 체제 유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공사에서 개발부문 분리 - 개발자회사에 대한 민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체제(비축+개발) 유지 - 정부의 자본금 대폭 확충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공기업 투자 및 민간 재원조달로 규모확대 용이 - 전문기업의 취지에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형유지로 국제경쟁에 유리 - 안정적 조직 운영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일시적 인지도 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불리한 효과 - 조직 개편에 따른 불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유(자본금의 96%)의 공공성 유지에 따른 외부재원 도입 곤란 - 공기업 비효율성 존재
조직개요	<pre> graph TD Gov[정부] -- 100% --> OilCo[석유공사] OilCo --> Dept1[• 전략 수립] OilCo --> Dept2[• 석유 정보] OilCo --> Dept3[• 석유 비축] OilCo --> Dept4[• 에 특 관리] OilCo --> Dept5[• 기타 지원] OilCo --> OilDevCo[석유개발자회사] OilDevCo -- 출자 51% (민간 49%) --> OilDevCo OilDevCo --> SpecialInv[시추선 부문] </pre>	<pre> graph TD Gov[정부] -- 100% --> OilCo[석유공사] OilCo --> Dept1[석유개발부문] OilCo --> Dept2[시추선부문] OilCo --> Dept3[석유비축부문] OilCo --> Dept4[• 석유 정보] OilCo --> Dept5[• 에 특 관리] OilCo --> Dept6[• 기타 지원] </pre>

제3차 국가 에너지자문회의에서는 석유공사 혁신 T/F가 검토한 석유공사 자원개발부문 육성에 대한 세부방안이 보고되었다. 이 방안은 석유공사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육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1단계는 현 체제하에서 개발사업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경영 효율성 및 재원 확보로 자생력 기반을 마련하되,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공사 생산량이 15만 b/d에 이르는 것을 목표시점으로 설정하여 출자확대 등 석유공사 육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제2단계는 제1단계의 목표생산량을 달성한 후 자원개발 자회사를 설립하여 30만 b/d에 달하는 규모에 이르기까지 독자성장을 유도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3단계는 생산규모 50만 b/d에 달하는 지역 메이저사로 성장해 자체역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석유회사로 성장시킨 후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서 참여정부의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방안은 그간의 많은 논란 속에서 큰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석유공사를 국제 경쟁력이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석유공사 3단계 육성방안 >

1단계(경쟁력 확보) : 경영 효율성 및 재원확보로 경쟁력 기반 마련
생산규모 약 15만b/d

2단계(독자성장) : 일정수준 경쟁력 확보 후 독자성장 체제 구축(자회사 분리)
생산규모 약 30만b/d

3단계(글로벌기업화) : 지역 메이저로서 자체역량으로 사업추진(민영화 추진)
생산규모 약 50만b/d

4. 기술과 인력육성의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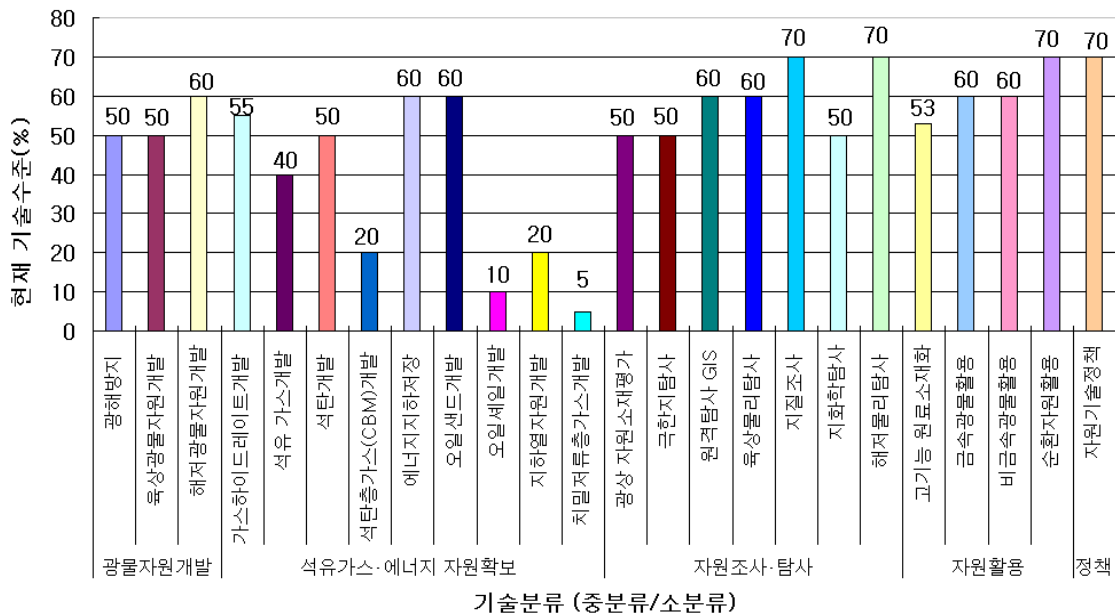
가. 기술개발

한 국가의 자원산업 상류부문(조사, 탐사, 개발 분야 등)에 대한 자체 기술 능력의 보유 여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확대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광구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개발 설계에 대한 검토, 계획된 개발 방법에 대한 현실적 적용성 여부, 국내 사업 환경을 고려한 투자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을 하려면 평가자 또한 상당한 수준의 기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개발기술은 선진국의 50~70% 수준이다. 이중 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순환자원활용, 자원기술정책 분야는 선진국의 70% 수준으로 비교적 상위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석유 분야는 경험 부족 등으로 초보 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기술 분야 수준



참여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지원시스템의 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자원개발기술 분야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중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과제로 기술향상을 도모하였다.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기술개발 목표

단계	추진목표
1단계 (2005~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프로젝트 경제성 평가(F/S), 운영·관리기술 자립화 · 대규모 노천광 개발 설계, 개발기술력 확보 · 석유회수 증진(EOR) 기반기술력 확보
2단계 (2009~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탐사, 개발, 생산기술 자립화 · 심해저 및 한계지역 자원탐사개발 기술력 확보

또한 자원개발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계(핵심기술), 산업계(탐사기술·설비개발) 간의 역할을 정립하는 자원개발 R&D 시스템 정비와 함께 본격적으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사업 착수 등 자원개발 분야의 연구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현재의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광종별·사업단계별 필요기술 및 도달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자원개발 R&D 로드맵 연구용역을 2006년에 발주하였다. 이는 2007년 중 확정되어 향후 자원개발 분야 기술개발의 기틀이 될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자원개발의 대상지역이 극지나 오지(奧地)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러한 열악한 작업여건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결할 것이다.

나. 인력육성

투자자금 부족과 함께 국내 자원개발 산업의 확대에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인력부족 문제다. 특히 석유개발사업의 전문인력은 400명 내외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유전개발 기술인력은 250명으로 일본 3,500명의 1/14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민간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축소로 해외자원개발 전문 인력이 이탈하였고,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졸업 후 취업률 저조로 학부제 실시 이후 관련 학과들이 통폐합되어 자원개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 해외자원개발 기존 전문기술인력 현황 〉

구 분		기존 기술인력(2005)	
		석 유	일반광물
기술인력	공기업	110	170
	민간기업	70	70
R&D 인력	대학	28	32
	연구소	40	20
소 계		248	292
합 계		540	

자료 : 석유공사혁신 T/F 자료, 2006

정부는 현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9월부터 관련분야 간접종사자 또는 학사 출신을 중심으로 단기교육 프로그램인 “자원개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 자원개발 아카데미 운영 일정 및 계획〉

교육기간	교육인원	지원액	교육 과정	비고
제1기 '06.9 ~ '07.2	30명	2억	- 탐사, 시추, 개발 등 직접 기술분야 - 평가, 법률, 협상 등 직접 지원분야 - 회계, 펀드운용 등 간접 지원분야	- 예산확보 - '06.7: 교육기관 공모 실시
2기~7기 ('07~'09)	180명	연간 5억	- 기본 교육과정에 필요한 직접 개발기술분야 추가	-

이와 함께 단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에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에 자원개발 전문인력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이는 2007년 4월에 최종 확정되어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자원개발 전문인력 마스터플랜(안)에 따르면 현재 2016년까지 정부가 목표한 자
주개발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유·가스부문 2,495명, 유연탄·광물 1,385명 등 총
3,880명의 신규 기술 및 R&D인력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자원개발 전문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

구 분		2005(기존 전문인력)		2008	2013	2016
		석유·가스	유연탄·광물			
기술 인력	공기업	112	170	695	1,662	2,210
	민간	68	70			
R&D 인력	대학	28	32	328	813	1,103
	연구소	40	20			
전문지원인력		-	-	177	425	567
합 계		540(248+292)		1,200	2,900	3,880

이를 위해 대학교육의 정상화, 현장중심의 인재양성체제 구축, 교육·연구 기반조
성을 위한 중장기 인력양성 프로그램 수립 등의 안이 제시되었다. 우선 기존 대학
(원)을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기초·고급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자원개발특
성화대학(원)을 지정 운영할 구상이다. 또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및 출
연연구소를 핵심기술·정보센터로 지정하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력양성 프로그램 안>

- ▶ **자원개발 아카데미** : 개발분야 간접종사자 또는 학사출신 위주의 단기 전문인력 육
성과정('09년 말까지 210명 재교육)
* '10년 이후 자원개발 인력양성센터로 확대 개편
- ▶ **자원개발특성화대학(원)** :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 기초·고급 전문인력 육성('07년
제도적 기반 마련, '08년 설립추진)
- ▶ **자원개발전문대학원** : 전문대학원 별도 설립, 현장실무형 석사학위 이상의 고급기술
인력 육성('07.3월 설립, '09년부터 연간 60명의 석사 배출)
- ▶ **자원개발 인력양성센터** : 인력양성 전담 전문관리조직('07년 제도적 기반 마련, '08
년 설립추진)
- ▶ **핵심기술·정보센터** : 대학 및 출연연구소 핵심기술·정보센터로 지정운영, 자원개발 정
보화사업 및 R&D 지원('07년 제도적 기반 마련, '08년 지정운영)

제 5 장 멀지만 가야 할 길, 해외자원개발

1. 참여정부 해외자원개발의 성과

참여정부 출범 후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안정적 도입”에서 “적극적인 자원개발”로 수정하여 정상 자원외교를 본격 전개하고 해외자원개발 추진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1977년 파라과이 우라늄광산 개발 및 1981년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유전개발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이 사상 최대의 호황기를 누렸으며 태동기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참여정부하에서의 해외자원개발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를 다시 한 번 정리한다.

① 원유 매장량 107억 배럴 추가 확보

참여정부 들어 정상자원외교를 필두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기업의 노력으로 추정매장량 107억 배럴 규모의 원유·가스를 확보하여 2007년 6월말 현재 확보한 추정매장량은 159억 배럴이다.

이는 참여정부 초기 본격적으로 정상자원외교를 전개하기 직전의 52억 배럴보다 약 3.0배가 늘어난 것으로 참여정부 기간 동안 확보한 탐사광구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자주개발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광구, 나이지리아 OPL 해상광구, 카자흐스탄 잠빌광구, 우즈베키스탄 아랄 해 가스전, 아제르바이잔 이남 광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등 유례없는 대형 프로젝트의 확보 성공으로 외환위기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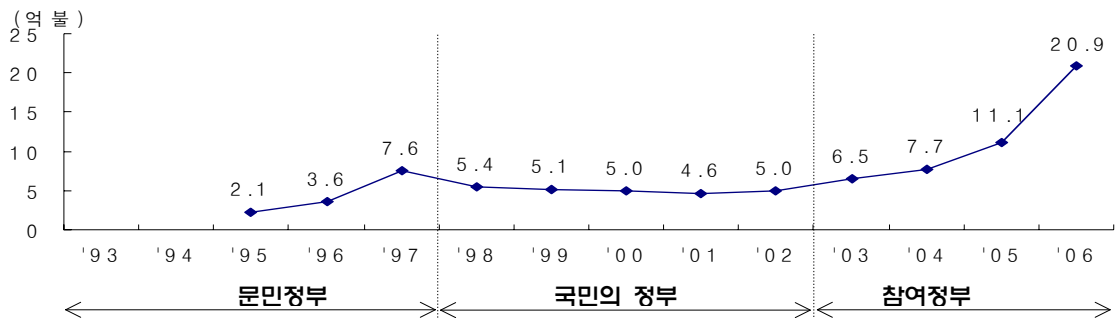
〈표 5-1〉 석유·가스 추정매장량

구 분	' 01	' 02	' 03	' 04	' 05	' 06	' 07.6
전체 (억 배럴)	48	52	54	60	87	138	159

②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활력을 회복하여 성장기에 진입

해외자원개발사업도 최고의 활력을 가진 기간이었다. 외환위기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철수하던 침체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외자원개발사업 수가 2006년에는 218개를 기록함으로써 사상 최초로 200개를 돌파하였고, 투자액도 2005년에는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06년에도 2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자료 : 산업자원부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우선 투자광구의 규모가 달라졌다. 2003년 이전에는 1억 배럴 규모의 소형 광구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최근에는 서캄차카(예상매장량 15억 배럴) 등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광구 위주로 전환되었다. 2003년 이전에는 확보한 탐사광구의 평균비용이 90억 원에 불과했으나 2003년 이후에는 5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도 규모의 성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업의 형태도 선진화에 한발 더 다가갔다. 단순 지분참여 중심의 유전개발 패턴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권을 확보한 사업 수가 크게 증가하여, 2002년에는 17개에 불과했던 것이 2006년에는 34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주요 성공사례>

- ▶ 나이지리아 OPL광구(우리 지분 : 60%) : 추정매장량 20억 배럴의 대형유전
- ▶ 카자흐스탄 잠빌광구(우리 지분 : 27%) : 추정매장량 10억 배럴의 대형유전
- ▶ 우즈벡 아랄해가스전(우리 지분 : 20%) : 추정매장량 14억 배럴의 대형유전
- ▶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 125백만 톤, 세계 4대 광산

② 신흥 자원유망국가와의 자원협력채널 확대

참여정부 출범 후 러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 유망국가와의 자원협력채널을 확대하였다. 나이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 새로운 18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양자 간 자원협력채널이 구축된 나라가 총 25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와 협력채널을 가진 25개 국가는 전 세계 석유매장량 중 44.5%에 달하는 석유를 점유하고 있어 협력대상국가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2006년에 러시아와 호주 등 14개 자원부국과 자원협력위를 개최하여 자원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였다. 참여정부 기간 중 전략적 자원협력과 정상자원외교를 통해 에너지·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석유, 철광석 등 전략자원의 도입선 다변화를 이루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였다.

〈표 5-2〉 참여정부의 자원외교를 통한 석유, 철광석 등 전략자원의 도입선 다변화

자원	의존도	참여정부 이후 성과	비고
원유	중동 (82%)	○ 총 107억 배럴 규모의 유전 확보(우리 측 지분 감안) 러시아(서감차카, 15억b), 브라질(BMC-30/32, 3억b), 나이지리아(해상광구, 12억b), 카자흐(잠빌, 4.5억b) 등	12.1년 사용분 (연 8.8억 b)
철광석	호주 (65%)	○ 총 7억 톤 규모의 철광석 장기 도입 체결 인도(30년간 6억톤), 브라질(10년간 1억톤)	16년 사용분 (연 4,400만 톤)
우라늄	호주 (25%)	○ 총 11.1천 톤 규모의 우라늄광 확보 카자흐스탄(7.5천톤), 우즈베크(3.6천톤)	2.8년 사용분 (연 4천 톤)

③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 개발

대부분의 후발 산유국들은 풍부한 자원개발과 함께, 부족한 인프라(에너지, 도로, 통신 등) 확충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선, 플랜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 등의 부문에서 세계 일류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보유국의 여건과 우리 에너지 산업 강점을 전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자원개발 경험 부족 및 메이저 기업 미보유 등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표 5-3〉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의 주요성과

대상국가	주요 내용
<p>나이지리아 (유전+발전+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사업 진출과 연계하여 20억배럴(우리지분 12억배럴) 규모의 해상광구 2개(OPL 321/323) 확보 ('06.3월) ○ 125억불 규모 철도사업(1,500km)과 연계 생산유전 인수 추진('06.11월)
<p>마다가스카르 (니켈광+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4대 니켈광산(암바토비) 개발사업에 캐나다, 일본 기업과 함께 참가 (한국기업 지분 : 27.5%) ○ 120Mw급 화력발전 사업(1.8억불 규모) 수주 ('07.2월)

중전의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에만 몰입하던 자원개발 전략을 수정하고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2006년 2월)하여 에너지산업과 해외자원개발을 연계시키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개발하였다. 전략지역에 대한 조사단 파견 및 공동진출 프로젝트 발굴과 함께 나이지리아에 이 모델을 적용하여 발전과 연계한 유망 심해광구를 확보하고 철도 현대화와 연계한 생산유전 지분매입을 성사시켜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일방적인 구매를 통해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던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협상력을 높인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원개발 방식을 구축하여 해외자원개발의 신기원을 개척하였다.

④ 유전개발펀드 도입

2013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18%)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16조 원(유가 40달러 기준)의 재원이 필요한데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공공부문(8조 원) 및 민간기업(6.4조 원) 외 총 소요재원의 10%는 풍부한 시중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을 통해 유전개발펀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제1호 펀드를 2006년 11월에 성공적으로 출시하였다.

유전개발펀드라는 신규 투자재원 발굴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최대 애로요인인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자원개발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⑤ 한·러 가스협력협정 체결

세계 2위 LNG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스 부국인 러시아와 가스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협상의 난관을 딛고 2006년 10월 협정체결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가스 1위 수출국인 러시아와 가스전 개발, 가스배관, LNG액화기지 건설 및 공급 등 가스 관련 전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가스소비량의 1/3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	
협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 9. : 대통령의 러시아방문시 가스협력협정 체결기로 합의 ○ '04~'05. 5. :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문안 실무안 최종합의 ○ '05. 11. : APEC 정상회의시 동협정을 체결기로 하였으나, 러측이 협정 체결의사 철회 ('04년 당시 실무안으로 회귀) ○ '06. 2. : 러측과 서면협의를 재개 ○ '06. 6. : 실무협의를 재개하여 주요쟁점 합의(실무안 가서명 체결) ○ '06. 10. : 러 총리 방한시 동 협정 체결
체결효과	○ 이르면 2012년부터 연간 700만 톤(국내 가스소비량 1/3)의 대규모 가스를 안정적으로 도입 전망

⑥ 산유국의 꿈 실현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역사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에서 다시 재현되었다. 신화와도 같은 산유국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제1차 종합탐사계획('97~'07) 수립 직후인 1998년 7월 동해에서 최초로 경제성 있는 가스전(동해-1)을 발견한 이래 2004년 7월 시험생산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생산

하였다. 동해-1 가스전은 가채매장량이 530만 톤에 이르고 천연가스와 원유를 15년 동안 생산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5번째로 산유국에 진입하였다.

〈표 5-4〉 동해-1 가스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채매장량 : 총 2,650억CF(LNG 환산 530만 톤) · 생산량 : 천연가스 0.5억CF/일, 원유 1,200배럴/일 · 생산기간 : 약 15년('04년~'18년) · 공급처 : 가스(가스공사), 원유(S-oil) · 수입대체효과 : 20.5억 달러[530만톤×387\$/톤('05년도 LNG 도입평균가)]

⑦ 우리 힘에 의한 베트남 11-2광구의 준공

순수 국내 기술과 자본으로 개발된 베트남 11-2광구가 가스생산을 시작했다. 2006년 11월 준공식을 갖고 본격 생산에 착수한 룡도이 가스전은 연간 최대 107만 톤의 천연가스와 153만 배럴의 초경질 원유(컨덴세이트)를 23년 동안 생산하게 된다.

이번 개발은 광권 획득에서 탐사, 개발, 생산까지 전 과정을 우리 업체가 단독 수행한 첫 해외 가스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룡도이 가스전은 한국석유공사가 탐사·개발·생산의 전 과정을 주도했으며 핵심설비인 2.1억 달러 규모의 생산(압축·분리·냉각) 시설도 국내업체(현대중공업)가 건설, 우리의 석유개발역량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11-2광구에는 룡도이 가스전 외에도 이미 탐사에 성공한 2개 구조가 더 있어 매장량과 경제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써 2003년 생산에 착수한 15-1광구와 함께 베트남에 진출한 유전개발사업이 모두 생산광구로 전환되었다.

⑧ 캐나다 오일샌드 진출로 대체 원유자원 개발토대 마련

2006년 7월 고유가로 석유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캐나다 오일샌드를 확보함으로써 대체 원유자원에 진출할 만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채산성이 낮아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오일샌드가 고유가 시대로 진입하면서 '제2의 황금'으로 각광받고 있다.

2. 앞으로 남은 과제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상승, 중동의 정정 불안, 자원민족주의 확산, 중국의 자원폭식으로 촉발된 자원확보 경쟁 등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참여정부는 국제 시장에 대응하는 해외자원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그 역사는 짧지만 이미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서 국제 자원 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이제 도약기의 시점에 머물러 있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정책과제가 많다.

참여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자원개발의 핵심 요체인 기술과 인력, 정보 시스템 등 자원개발의 인프라 구축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한두 해에 완성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 과제이고, 또 지난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인프라가 거의 붕괴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추스르고 육성하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자원개발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인프라 부족은 앞으로 우리 기업의 자원확보 역량을 키우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고충 때문에 정부는 우선 공기업을 중심으로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2006년에는 자원아카데미를 세워 자원개발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한 자원개발 인프라 확대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자원개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자원개발 R&D 로드맵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자원의외교도 보다 체계화·전략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들어 과거에는 거의 없었던 정상자원의외교가 적극 추진되었고, 양자 간 협력체인 자원협력위원회도 대폭 확대되어 이를 통한 자원확보 성과도 매우 컸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자원외교 횟수에 비해 이를 체계화하고 전략화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자원외교가 적극 추진된 것은 참여정부에 들어서이고, 아직은 양적으로 팽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조망해 보고 검토해 볼 여유는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자원외교 성과를 재분석하고, 자원외교에 대한 산자부와 외교부 등 부처 간의 역할과 부서 내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각 정부단위에서 추진하는 자원외교는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의 자원외교 활동을 연계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기획하는 자원외교 총괄 구심체가 정부 부서 내에서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원외교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원보유국에 자원관을 두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자원보유국의 개발사업권은 거의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자원보유국의 개발 정보와 인맥관리가 상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수행할 자원관제의 신설 및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더욱 확대되려면 정부의 자원개발 관련 재정이 더욱 늘어나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비는 20~30% 내외 수준이다. 우리의 자주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수 배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더욱 늘어나야 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차별 없이 지원되고 있다. 단순히 지분투자만 하는 자원개발 사업이나, 우리가 운영권자로 참여하면서 인력과 기술 육성기회가 높은 사업이 모두 차별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또 비상시 개발자원의 도입가능성, 공급다변화 효과 등 우리나라 에너지공급안보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투자유형과 자산특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에 얼마나 편익을 미치느냐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공급안보나 경제적 편익이 높은 사업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규모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의 한계로 정부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에 대한 정부자금과 금융기관, 금융제도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자금은 위험도가 높고 공익적 편익이 큰 사업에 주로 지원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금융제도를 통해 수출입은행, 자원개발펀드 등 금융시장에서 공급받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그리고 용자심사운영 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를 대행하여 석유개발사업의 용자는 석유공사에서, 일반광물자원 용자는 광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사업심사를 위한 용자심의회를 각각 운영함으로써 용자심의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과 용자수혜기관이 동일한 데서 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7년부터 용자심의회 설치·운영 주체를 석유공사 및 광업진흥공사에서 산자부로 변경할 예정이다. 정부의 현 계획같이 용자심의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고 용자심의기능을 정부에서 직접 맡되, 장기적으로는 가칭 “해외자원개발 지원단”을 두어 용자심의기능과 관리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여기서 “해외자원개발 지원단”은 용자심의 및 운영뿐만 아니라 정보, 인력, 기술 등 국내의 해외자원개발 인프라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2006년 11월 제1호 자원개발펀드가 성공리에 출시되었지만 향후 자원개발펀드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먼저 자원개발펀드는 우선 투자자 유인의 제약요소인 고위험, 높은 불확실성의 자원개발 사업특성을 감안할 때 “위험과 불확실성”을 담보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와 저수익이지만

안정된 소득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연계한 펀드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개발 관련 옵션시장이 발달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금융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자원개발 재정지원은 가급적 금융시스템과 결합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자주개발 목표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정책적 개념을 가져야 한다. 즉, 정부가 세운 주요자원 자주개발 수치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자율적인 사업의 유지·확대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주개발 목표는 정책의 추진상황 평가와 정부의 예산 편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철폐할 수 없지만 너무 목표에 얽매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주개발 목표를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선진국들이 선점하고 있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사업영역이긴 하지만, 제대로 하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주요한 사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가 일정 규모에 달할 때까지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